

2015 평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5 Peace Foundation Symposium 11th Anniversary

희망을 찾는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통일코리안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과 변화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3:00	접 수	
13:30	기념식	
	인사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기념영상	
	축 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13:50	심포지엄 개최	
13:5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00	기조발제	대한민국, 한반도, 한인(韓人)의 평화와 통일은 지구촌적 '창조'작업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14:20	사 회	최상용 전 주일대사, 현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14:25	세션 1	분단 70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발표 1	욕망은 있으나 희망은 없는 사회 : 성장 신화와 한국인의 욕망 원용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
	발표 2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발표 3	우리 밖의 북한, 우리 안의 북한, 그리고 중북 엑소시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4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5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40	휴 식
15:55	세션 2 통일코리아, 한국 사회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려면? 최상용(사회), 원용찬, 박태균, 이대근, 고경빈, 김호기
17:15	청중 질의응답
17:45	닫는 말
17:50	폐 회

차례

모시는 글

- | | |
|-----|--|
| 6 | 약력 [기조발제자, 사회자, 발표자] |
| 8 | <p>기조발제 대한민국, 한반도, 한인(韓人)의 평화와 통일은 지구촌적 ‘창조’작업이다</p> <p>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p> |
| 27 | <p>발표 1 욕망은 있으나 희망은 없는 사회: 성장 신화와 한국인의 욕망</p> <p>원용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p> |
| 41 | <p>발표 2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p> <p>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p> |
| 53 | <p>발표 3 우리 밖의 북한, 우리 안의 북한, 그리고 종북 엑소시즘</p> <p>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p> |
| 66 | <p>발표 4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p> <p>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p> |
| 110 | <p>발표 5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p> <p>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

모시는 글

분단 70년째인 2015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분단 7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제를 찾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을 성찰하는 사이에도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설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상황은 물론 국내외 경제 환경도 질주하듯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청년실업과 노인문제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 차원에서 분노역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현실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차분히 과거를 성찰할 시간도 주지 않을 것처럼 나라 안에서 도전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통일의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무모한 욕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하는 미래의 길을 새삼 확인해야 하고, 그러자면 과거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이지만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고 새로운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민족사적 최우선 과제인 통일코리아를 염두에 두면서 당면한 현실의 사급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시각과 정치안보적 시각에서 고민해 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통일코리아를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과 변화를 주제로 준비한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이 희망을 찾기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약력



기조발제 김 진 현

-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건립위원장
- 과학기술처 장관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사회 최 상 용

- 현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한국정치학회 회장



발표 원 용 찬

- 현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장
 - 전 (사)한문화 메트로 이사장
 -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 전북 경실련협의회회장
-



발표 박 태 군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역사비평 주간
국제교류재단 운영자문위원
Pacific Affairs 편집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발표 이 대 군

현 경향신문 논설주간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포럼 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발표 고 경 빈

현 (재)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하나원장)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발표 김 호 기

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정치사회학회 부회장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전 미국 UCLA 방문학자

대한민국, 한반도, 한인(韓人)의 평화와 통일은
지구촌적 ‘창조’작업이다

김진현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content

- I. 들어가면서 - 이 땅에 사는 틀
 - II. 첫 번째 기적- '대한민국 근대화혁명'
 - III. 두 번째 기적- '도착적 근대화' (perverted modernization)
 - IV. 세 번째 기적- 두 기적 연장은 자멸의 길이고 두 기적을 극복 승화하면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
 - 1. '정의의 평화'
 - 2. 통일 - 안보논리와 평화논리
 - 3. '지구촌 인류문제군'(global problematiques)의 중심 - Pax Universa
 - 4. 죽었다 깨어나는 고비
 - V. 평화, 통일 창조로 가는 비전과 실천의 고안들
 - 1. 참화- 고백과 사면의 제도화
 - 2. 안의 평화, 안의 통일이 최우선이다.
 - 3. 비대칭적 능력(연성력, 경성력)의 충실- '한국판 21세기 적십자 운동, 불십자 운동'
 - 4. 세 번째 기적 만들기 위한 새 주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부록]

I . 들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틀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아서도 안된다. 과거의 눈으로 오늘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어제의 눈으로 내일을 꿈꾸어서도 안된다. 미래의 꿈으로 오늘을 재단해서도 안 된다. 어제와 오늘의 진실 그리고 내일의 알찬 꿈이 융화의 용광로에서 녹아야 바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어제, 오늘, 내일을 종합, 균형있게 보는 통합적관념, 통시(通時)적 시관(時觀)을 가져야 한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만 보면 세상이 좁아진다. 내가 선 이곳 넘어서의 먼 것도 두루 섭렵해야 한다. 이 땅의 자로 바깥세상을 재어서도 안된다. 바깥의 자로 이 나라를 그려서도 안된다. 이 땅에도 바깥세계도 모두 자기 나름의 자리가 있고 역사가 있다.

이 땅, 이웃, 지구촌 공간을 종합, 균형있게 아우르는 통합적 관념, 통장(通場)적 장관(場觀)을 가져야 한다.

나와 우리, 우리와 남, 이곳과 저곳, 이것과 저것을 통시적, 통장적으로 보는 융합의 안목과 균형의 지혜와 중용의 성숙으로서만이 나와 사회공동체와 나라와 지구촌의 생명, 안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경계할 일은 비판을 거치지 않는 또는 비판을 허용치 않는 비(非)비판, 무(無)비판의 낙관주의, 현장주의, 직선주의, 일방주의이며 비비판, 무비판의 비판주의, 부정주의, 반대주의, 냉소주의이다. 이 둘은 모두 비비판, 무비판의 저항주의와 투쟁주의, 비비판 무비판의 타협주의 그리고 비비판, 무비판의 중간주의를 낳는다. 그 결과는 폭력과 선동의 폭주로해서 자멸로 가거나 문제회피와 현상연장의 무사안일 안주로해서 자멸로 간다. 극단의 폭력과 극단의 사리(私利)의 온상이다.

진실에 대한 외경(경건), 정의에 대한 믿음(정직), 그리고 인의 자비 사랑의 행동(연대·관용, 융합)이라는 도덕률 없이는 오늘 대한민국과 지구촌 삶의 실체에 접근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다.

II. 첫 번째 기적- ‘대한민국근대화혁명’

광복 70년, 망국 105년, 문호개방(1876년)으로 쳐서 139년의 ‘근대’를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 경탄할 극단적 대극성, 양극성, 반동성을 발견한다. 역사의 지체와 조숙이라는 극단적 양극성 반동성의 물리적 작동현상을 보게 된다.

극단적 대극성

1. ‘최후의 은둔국’(last hermit kingdom)에서 세계화를 국정의 목표로 내걸고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마치 홍콩, 싱가포르 같은 모습의 항구국가, 개방국가로 바뀌었다.

2. 역사 이래 대륙지향 대륙문화권이었던 한반도가 1945년 분단이후 대한민국은 생명자원인 에너지(96%)와 먹거리(쌀 제외 90%)를 수입에 의존 해양국가가 되었다. 절대적 해양국가가 되었다. 선진국치고는 진기한 기록이다.

3.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 가장 가혹한 식민지배, 분단, 전쟁의 연속과 그리고 혹독한 생명자원 조건의 가장 낙후된 후진국이 ‘근대화’(Modernization)의 조건 즉 정치민주화, 시민자유, 근대경제성장, 교육과 과학기술의 고등화, 사회문화의 다원성을 거의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나는 이를 ‘대한민국근대화혁명’이라 부른다. (※ ‘대한민국근대화혁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고) 르네상스 이후 선진국의 근대화경험에서도 특이하고 제3세계 국가의 근대화과정과 비교해서는 특별히 돌출적이고 단군 이래 한인의 역사경험에서도 특이한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이다.

4. 제3세계라 해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사회와는 달리 전통종교, 고전종교 즉 불교, 유교가 1500년 이상 뿌리 내렸던 한인문화에서 근대화전개와 더불어 비(非)전통외래 서양종교인 기독교가 인구의 30%에 이를 만큼 특이한 변화를 보였다. 전통종교를 가졌던 비서양국가 중 기독교 인구가 10%이상된 나라가 없다(일본은 한국보다 200년 먼저 카톨릭이 전파되었지만 현재 기독교 인구가 2.5%). 더욱 기적적인 것은 1500만 명 정도의 신자를 가진 한국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3억5천만 인구의 미국 다음 기독교선교 세계2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 선교 종주국이었으며 인구도

한국보다 훨씬 많은 정통 기독교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을 제치고 압도적 2위이다.

우리나라 파워그룹 엘리트 세력에서는 과반수가 기독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독교 우세국가(de facto christian state)라 할 수 있겠다. (곧 미국 따라잡아 해외선교 1등 국가가 되는 'Christian Pax Koreana'를 만들자는 교파도 있다.

5. 대극적 한인(韓人)

한 달에 1000번 이상 112신고 전화하는 시민이 평균 5명이나 되는 '자유'시민(?) 대한민국 X 3대 세습 왕조 '주체' (?) 신정(神政)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구성원은 모두 단군신화의 한인이다)

Ⅲ. 두 번째 기적- '도착적 근대화' (perverted modernization)

문명 문화 간의 접촉과 수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종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외래요소는 현지 전통 바탕에 100% 수용되지 않고 또 아무리 저항해도 전통요소도 100% 보존되지 않는다. 외래요소와 전통요소는 서로 만나고 부딪치면서 '대체'와 '변질'과정을 거쳐 변종(hybrid)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양성(良性) 선질(善質)의 변종으로 가느냐 악성(惡性) 패질(悖質)의 변종으로 가느냐는 외래자의 작용 뿐 아니라 수용주체의 주체성 그리고 선별 능력과 수용능력에 따라 대체와 변질의 내용이 된다.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은 초고속 시간압축, 초고압공간밀집, 초고도모방 집중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초고속 초고압 초고도 집중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분단, 해양화, 유학, 이민, 외래종교, 대외지향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가능했다. '대한민국근대화혁명'의 극단적인 대극성, 양극성, 반동성이 악성변종으로서의 '도착적근대화'라는 또 하나의 기적 즉 선진국의 근대화과정에서도 제3세계의 근대화와 정에서도 찾기 힘든 기적적 변종을 산출했다.

극단적 악성변종

1. 전통의 좋은 가치와 제도 그리고 근대(modernity)의 좋은 가치와 제도가 만나 더 좋은 가치와 제도와 상징으로 발전, 수렴, 승화시키지 못하고 형해화된 가치, 얼치기 비실질적 제도, 극단적 행동, 하울만의 상징을 낳는 변종 근대화, 악성변종(perverted hybrid)으로 나타났다. - ‘한강의 기적’ 경제 제1주의, 운동권적 민주화 제1주의, 폭력진보의 독선, 가족이기주의, 외형중심, 재벌중심주의

2. 전통과 근대 합작의 사생아 현상 - 동양전통의 가족주의 혈연연대와 서양근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나 ‘자유로운 개인들이 가족 같은 연대의 합리적이고 다원적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의 충실과 같이 사회공동체에도 책임 있는 도덕적 개인’이나 ‘자율적 개성적 인격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주의’, ‘가족왕국’, ‘폐쇄적 집단이기주의’, ‘독선적 이념왕국’, ‘재벌왕조’로 전락, 도착, 변질 되었다. 인간, 사회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한갓 이기적 목적을 위한 이용, 활용, 착취, 탈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익, 공익,公德(公德), 공동선 같은 것은 구호로만 형해 되고 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물론 보다 엄격한 공법인격인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재단 그리고 학교, 교회, 언론, 법조마저 가족이기주의 개인 가족왕국으로 사유화되고 대물림되고 있다.

3. 이런 곳에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도, 자율 합리적 경영 관리의 책임 있는 사회공동체도-심지어 법도 국가(공화국)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도 공법인도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인연, 패거리가 법과 공동체위에 군림한다.

4. 극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 규모로 커진 새로운 부와 권력과 의 혼맥, 지연, 학연으로 형성된 ‘한국의 새 귀족’(establishment, 특히 재벌 2,3,4 세대와 그와 혼맥 맺은 군·관료출신 가문)의 noblesse oblige, 君子다움의 결여가 생산하는 사회적 국가적 신뢰의 결여와 갈등을 증폭. 특히 정치권력과 재벌주변을 추종 배화하는 지식인 언론인 문화예술인들이 갈등을 증폭 생산하고 있다.

5. ‘한강의 기적’으로 생성된 군관산(軍官産) 권력 복합체와 극단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파생된 변종인 친북 종북과 재벌회사 귀족노조들이 합작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의 통합관리능력의 파손 함몰 그리고 자율 독립적 전문적 governance의 의지약화, 지식 지성인의 합리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의 부재, 사리(私利)를 넘어선 사회공동선 공익 국익추구 능력의 약화, 3포 5포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소극성 즉 추상적 이상과 높은 사회가치 추구에 대한 열정의 냉각까지 겹쳐 국가 사회공동체의 공동화

해제를 촉진하고 있다.

6. 압축적 근대국가 형성과정과 분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국가’, ‘시민국가’, ‘공화국’ 등 기본 개념과 현실 인식과 행위의 근본오류가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김진현,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과 지구촌 평화중심국가로 가는 길」, 카톨릭 인천교구 사제연수 강의, 2011. 6. 21) 국가의 큰 충격, 큰 사건, 큰 재난이 일어날 적마다 따라붙는 과담, 막장 드라마 같은 기행, 아니면 말고 식의 조작선동

7. ‘시민 없는 근대화’ 혁명

2015년 1월1일자 중앙일보 통단사설의 제목은 <광복분단 70년 ... 이젠 시민이다>였다. “국가민족과 상호협력하는 ‘신(新)시민시대’를 열어야 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뿌리고 밑거름을 뿌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교육’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70년 간 우리는 시민 없는 정치, 시민 없는 정당, 시민 없는 사장, 시민 없는 문화, 시민 없는 사법, 시민 없는 NGO만 존재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성취가 본래 의미의 참여와 책임 있는 ‘시민’이 주도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 ‘시민부재근대화’가 도착적근대화의 뿌리인 셈이다. 그 결과가 불신사회, 갈등선진국, 헬조선으로 낙착되어가고 있다.

신뢰, 존경, 화합이 깨진 나라

- 나라와 사회의 주류에서 존경받고 전범이 되는 어른이 소멸된 모래알 집단
- 나라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불행해진 결과가 된 나라, 특히 전두환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모든 대통령은 본인 또는 아들 형제가 부패혐의로 감옥생활
-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못 짓는 나라
- 경제계 최고 재벌집안 치고 본인이 유죄 판결 받거나 법정에 서거나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 사돈간 재산싸움 송사가 없는 재벌이 하나도 없다시피 된 기업계 leadership
- 새 지폐에 넣을 역대 대통령 정치 지도자 기업계 문화계 지도자를 한분도 못가진 나라 (Lincoln, Gandhi, 호치민, 손문, 게말 파샤, 손문, 드골, 처칠이 없는 나라)

예시1

국무총리실 작성 보고, 「“공정사회” 실현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구현」, 2011. 6. 17

▲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 내재

- 성과 지상주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소홀
→ 편법과 비리 구조의 고착화, 사고·행동·제도의 부조화
- 양적 성장에 추구에 따른 사회적 신뢰 기반 미성숙
→ 결과 불복, 상호 존중과 배려 약화
※ 신뢰지수 : OECD 29개국 중 24위
-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 심화
-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감소, 높아진 사회 갈등
- 사회적 위험요소 상존, 낮은 행복지수
※ 자살률 : OECD 평균 2.5배
행복지수 : OECD 30개국 중 25위

▲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동아일보 종합)

- ☐ 국민 10명중 7명, 우리사회 “불공정” 하다고 인식
 - 정치·사회·경제 분야를 종합한 공정성 점수 : 53.3점
- ☐ 불공정이 가장 많이 남은 분야 : 정치(31.2%)>법조(14.0%)>언론(12.1%)
- ☐ 우리 사회의 공존 저해 요인
 - 지도층의 부도덕(40.7%)>부의 편중·세습(28.3%)>고용·복지의 불평등(12.2%)
- ☐ 공정사회 핵심 주체 : 다같이 참여(64.3%)>정부(24.1%)>시민사회(8.7%)

⇒ **공정한 사회는 『위로부터의 변화, 국민의 참여』 속에 체계적 추진 필요**

예시2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 2015년 8월 서울국제포럼 하계세미나 강연 자료 중)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TUESDAY, NOVEMBER 3, 2015

Speaking up for Korea's 'lonely deaths'

SEOUL, SOUTH KOREA

BY CHOE SANG-HUN

In a culture in which funerals are often lavish three-day affairs with hundreds of guests, the recent funeral for Song In-sik was modest at best. It had only one guest — an activist who volunteered to hold a ritual for a person he had never met.

The activist, Park Jin-ok, placed a table of fruit, dried fish and artificial flowers before the refrigerated unit that held Mr. Song's remains in the morgue of Sungae

Hospital in Seoul. He burned incense and bowed, before the impatient mortuary director asked him to pack up and leave.

Mr. Song, 47, died in July; his body was found three days after his death, decomposing in his rented room. He was lucky to get even a makeshift funeral. A growing number of South Koreans are dying alone, with no relative willing to claim their remains and perform a ritual Koreans believe is essential to easing the deceased's passage to the other world.

The surge in so-called lonely deaths

South Koreans are increasingly dying alone, with no relatives to perform the funeral rituals.

— to 1,008 last year from 682 in 2011,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 provides a small but poignant glimpse of how South Korea's long-cherished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s changing. Though South Koreans have mostly benefited from a strong economy in recent decades, families have come under

strain from economic and demographic upheaval.

"Those falling behind get increasingly lonely because, unlike the poor of the old days, they see their communities destroyed for urban redevelopment," said the Rev. Kim Keun-ho, a Christian pastor who has been working among Seoul's dwindling hilltop slum neighborhoods, known as "moon towns."

"The poor and old have nowhere to go," Mr. Kim and other observers trace the problem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SOUTH KOREA, PAGE 4

(※ 도착적근대화현상의 분야별 내용은 부록2 참조)

IV. 세 번째 기적— 두 기적 연장은 자멸의 길이고 두 기적을 극복 승화하면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린다.

광복 이후 70년간 진행된 극단적 대극적 근대화혁명과 이 과정에서 결과한 극단적 대극적 도착적 근대화는 지금 이 땅, 이 나라 생명들에 perfect storm을 불렀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생명적, 민족적, 세계적 과제를 정의의 평화, 지구촌 통일의 기준에서 검토해보자. 안과밖, 공동체와 국가의 모든 영역, 모든 공간, 모든 세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넘기 위하여 보다 존재론적 인식, 그리고 보다 근원적, 생명·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1. '정의의 평화'

평화를 전쟁 아닌 상태로 규정한다면 옛날 보다는 평화가 크게 신장됐다. 2차 대전 이후 대국간

대전은 없어졌고 지역전, 국지전, 내전만 있을 뿐이다. 한반도도 1953년 이후 62년 간의 평화는 문호개방이후 가장 긴 평화기간 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법적으로는 ‘휴전’이고 휴전선(DMZ)을 마주보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밀집도가 높은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안보논리로 보는 한반도평화상태이다.

오늘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안보적 지정학적 조건 이외, 정치, 소득, 인구, 교육, 사회, 종교, 문화의 조건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 2000년부터 세계평화포럼이 발간하는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가 대표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회, 나라, 지역 그리고 주민의 삶의 조건 전체를 교량하여 평화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더 나가 최근 프란시스코 로마 법당이 전쟁이 없는 평화를 넘어 ‘정의의 평화’를 설교하고 다닌다. 정의의 평화는 천주교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5)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에서 처음 규정한 것이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실현인 것이다.... 또 항상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평화인 것이다.〉 이 사목헌장을 받아 김수환 추기경은 1988년 「평화란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평화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과 정의 문제입니다」 라고 규명했다.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논총 제1집) 법문사, 1988, pp 10-11)

21세기에 들어 확실한 것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 힘의 균형 유지, 압제에 의한 평정이 아니며 물질적 변형 속에 또는 기술적 진보의 편리로만 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는 사고와 접근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개념 즉 ‘정의의 평화’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평화’라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혁명’과 ‘도착적근대화’를 다시 정리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를까. 또 같은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일본을, 러시아를 해부한다면? 미국을, 스웨덴을, 영국을, 프랑스를 그리고 아랍과 아프리카를? 우리는 어느덧 평화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의 문제로 각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먼저 정치의 정의, 사회의 정의, 경제의 정의, 환경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 먹거리의 정의, 교육의 정의, 노동의 정의, 성(gender)의 정의, 세대의 정의에 대한 가치, 비전 제도, 실천의 의지가 없으려는 그 어떤 평화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이웃에게 남에게 한국발 평화의 울림도 신뢰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안에서 평화, 정의의 평화가 정착, 심화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평화, 세계평화를 실효성 있게 다룰 수도 주도할 수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 통일- 안보논리와 평화논리

1988년 김수환 추기경이 기조연설 한 같은 자리에서 나는 「평화논리와 안보논리」를 발표하고 목적과 수단이 모두 평화로운 평화국가 지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다. (앞 책 pp 257-270)

「남북통일도 안으로의 인간화, 민주화의 충실화를 거쳐 밖으로 안과 같은 개방화, 인류 지구촌화의 길을 걸을 태세가 돼 있을 때 이질성 극복이 가능해지고 통일 실천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이 곧 평화일 수는 없다. 통일의 방식이 평화로울 때 통일의 결과도 평화로울 것이다. 통일이 정의의 평화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보다 충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과 평화는 일치 할 것이다.

통일만을 우선한다면 전쟁에 의한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베트남이 그러하듯. 그러나 21세기의 지정학적 조건, 세계질서의 구조 변화, 문명사적 패러다임시프트는 북한에 의한 무모한 전쟁도발은 배제할 수 없으나 남한에 의한 전쟁도발은 가능하지 않다. 전쟁할만한 각오로 정의의 평화 실천에 충실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 4강과도 “정의의 평화”에 기초한 통일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굳건함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세속의 평화, 정의의 평화 모두 가능하다. 안보논리와 평화논리를 통합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Swiss의 영구중립의 기초이다.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쟁과 통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치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한 자율적 주체적 결의와 실천이다.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통일’을 말하지 않고 먼저 ‘유럽통합’을 주장하고 ‘평화’를 먼저 말하지 않고 ‘참회’에서 나오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 지원의지가 약화되는 지정학적, 안보적 이해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①우리가 내부의 통일, 통합, 융화, 결단의 역량을 4강이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고 ②안과 밖의 통일방해세력을 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비대칭적 능력, 비대칭적 연성력, 경성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근대화혁명’과 ‘도착적근대화’는 어떤 기여가 있고 어떤 결함이 있는가. 주변4강이 그리고 국제주류가 한국 내부의 통일역량과 그 연성, 경성력의 투사 능력과 결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가를 늘 자문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에서 한반도 통일의 교훈을 얻겠다는 것은 허구이고 망상이다. 통일 이전 분단 조건과 상태가 전혀 다르고 통일역량 특히 안의 정치사회 통합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독 콜 수상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Horst Teltschik의 『329일: 베를린 장벽붕괴에서 독일통일까지』를 대표로 하여 독일 통일과정의 많은 회고와 기록들은 한반도 통일은 창조의 작업이지 Model을 따르거나 모방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

게 된다.

반전 반무기 평화주의

◆ 한국의 반전주의자-한익사 고은광순

2015.8.12~9.9까지 백악관앞에서 23번, 펜타곤 앞12번, 보잉사 앞8번, 록히드마타사앞 3번 등 미국에서 반전 반무기산업 1인 시위 (한겨레, 2015.10.24)

◆ 미국의 반전주의자-보스턴대 사학과 교수 하워드 진

「한국 젊은이들에게 내 책이 반미주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잘 못 읽은 것이다. 나는 미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싸운 사람이지만 미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다.... 한국의 반미정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패한 이념... 인권을 무시하고 여행자유 보장 않는 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인가」 (문화일보 2005.11.8 인터뷰)

3. ‘지구촌 인류문제군(global problematiques)의 중심’ - Pax Universa

대한민국근대화혁명과 도착적근대화의 기적이 한국의 역사기준이나 세계사의 기준으로서도 기적이라면 그 특이한 역사적 경험의 내용을 다시 음미, 여과 추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기적의 경험은 달리 보면 한국이 선진국의 경험을 극단적으로 압축, 단축, 생략, 모방하여 그 어느 제3세계 국가보다 깊숙이 근대의 원천에 다가간 경험이기도 하다.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기고유의 고전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한국과 한인은 서양근대문화 문명의 옛과 오늘에 비교적 깊숙이 들어갔다. 동시에 ‘근대화의 세계화’가 전개됨에 우리 경험을 뒤따르는 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에게는 거울 또는 선구자적 경험이 되기도 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의 기적적 근대 체험은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지구촌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극단적 근대화와 선진국보다 앞선 도착적 근대화의 극단성으로 인하여 세계의 중심현상, ‘인류지구촌문제군’의 중심, 진양지가 되었다. 근대화혁명이나 도착적근대화현상은 분야와 정도와 질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제3세계 특히 중국과 인도

의 생명자원, 환경, 도시화, 인구문제군에서 현재진행 되고 있다. 심지어 서양선진국에서도 도처에 보인다. Bush, Clinton, Blair '가문'의 부패, VW, Takada, 도시바의 사기경영, 런던과 뉴욕 세계금융 중심가의 조직적 사기조작-모든 기존의 중심, 기준가치, 상징 리더십의 도덕적 타락 등이 그 예증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 근대위기의 본질이다.

에너지 먹거리 환경 지구온난화의 '문제군', 미래 초근대적 인류지구촌 문제군의 심각성과 절실성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국적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중국, 인도, 한반도가 가장 절박하다는 진실에 충실하면 근대화혁명과 도착적 근대화를 차분히 정리 수렴 할 수 있다.

중국의 물, 공기(PM_{2.5}황사), 에너지, 먹거리, 원자력, 환경, 전염병, 해수면상승, 도시화, 소득양극화, 부패의 문제는 바로 한인, 한반도엔 1차적으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중국문제군'의 해결을 주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도착적근대화 해결의 길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의 도착적근대화 문제군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중국문제군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촌 인류문제군 해결의 길이요 또한 새 문명질서 창조의 길이다. global Korea model의 창조이고 지구촌 인류평화(Pax Universa) 창조이다. 중국문제군, 인도문제군을 한 발짝 앞서 밟아 가는 것이, 즉 21세기 초근대를 앞서가는 현상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도착적 근대화 현상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두 기적의 체험을 정리 수렴, 극복 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한국의 평화 통일 창조이고 세계 평화, 통일의 새 길을 여는 세 번째 기적의 길이 된다.

4. 죽었다 깨어나는 고비

〈한반도의 1876, 1905-1910, 1945-1950, 1997-1998, 그리고 바깥세계의 2001-2015

- 2001 美 Sept 11
- 2006 북한핵
- 2008 세계금융위기
- 2009 중국 (CO₂ 배출, 자동차판매, 에너지 소비) 세계1등
- 2020 Arab Spring
- 2011 일본 3·11
- 2013 Pope Francisco 취임
- 2014 세월호 사건
- 2015 AIB 발족, 한국 MERS 재난

1876년에서 2015년까지의 마다마디를 새로운 아픔, 땀, 피, 눈물, 혼으로 불살라 먹고 씹아먹고

증발시키고 남은 마지막 정수를 얻는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세계 새 모델 창조, 새 문명 새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 창조, Pax Universa의 길이다.」 김진현, 『두 기적 -‘대한민국 근대화혁명’과 ‘도착적 근대화’의 극복 승화』, 도산리더스포럼 주제발표, 2015년 7월15일

〈그 어느 경우에서든 우리의 민족문화는 지금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문화란 언제나 그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대결할 때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그러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문화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론의 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안이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의 판소리나 고려자기 등등이 모두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것들이 저절로 세계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 첫째, 우리들이 우리 것을 잘 알고 그리고 남의 것도 또한 잘 알아야 우리 것은 비로소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양쪽을 조금씩 다 알고 있다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양자가 부딪치고 깨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한 번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이런 일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 같다.〉(박성배, 「민족문화와 세계문화」,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제8회 한국철학자연합대회 기조논문, 서울, 1995)

V. 평화, 통일 창조로 가는 비전과 실천의 고안들

1. 참회-고백과 사면의 제도화

‘혁명’과 ‘도착’의 주류세력은 정의와 인간다움의 기준에서 과거의 행적을 철저히 참회 반성해야만 과거를 정리 여과 수렴 극복하는 길이 열린다. ‘세월호’ ‘성완중’ ‘MERS’사태를 겪고도 국가개조의 동력이 붙지 않는 것은 주류의 참회가 없기 때문이다. 고백, 참회, 사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착

실히 추진해야겠다.

2. 안의 평화, 안의 통일이 최우선이다.

- ㉠ 모든 부문에서 성공과 도약을 정의와 생명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안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짜야한다.
- ㉡ 한인은 우리가 상대해야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인들 보다 평균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월등한 지구촌의 지식 정보를 갖고 닦아야 한다. 우월한 정의의 평화 가치 지향의 윤리적 실천자여야 한다.
- ㉢ 나라는 친미국, 친중국, 친일본, 친러시아의 엘리트들 키워야 하고 그 엘리트들은 상대국 파트너보다 1당 100의 우월한 능력의 전문가여야 한다. (Israel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서도 이들 친미 친중 친일 친러 엘리트들은 국가이익, 사회공익, 인류지구촌 평화가치에 수렴 일체화하고 엘리트의 특권을 이기적으로 사용(私用)하지 말아야 한다.
- ㉣ 한마디로 이 나라는 선진국(善進國)이어야 하고 이 땅의 한인들은 각 영역마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기능 양면을 겸비한 엘리트라야 한다. (Swiss, Netherlands, Sweden이 평화국가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록3. '善進國'참조)
- ㉤ 이미 부분적 개인적으로는 PSY박이나 문화 음악계 일부, 여자골프에서 보듯 Korea Model, Korea Standard가 곧 세계기준이 되는 것도 생겼고 각 부문에서 세계적 엘리트가 속출하고 있다. 안중근, 3·1독립선언문, 이승만, 김구, 안재홍, 탄허스님, 정의채 문사놀 등의 세계를 무대로 한 평화, 공생, 도덕, 문화 논지 속에 이미 선진(善進)과 정의의 평화 개념이 충만하다. 미래를 이 평화와 통일의 기준에서 설계하면 세 번째 기적, 지구촌 인류 문명의 새 길을 창조할 수 있다.

3. 비대칭적 능력(연성력, 경성력)에의 충실- '한국판21세기 적십자 운동, 불십자 운동'

한국과 지구촌 인류가 공감 일치하는 평화가치, 메시지의 발신

㉦ 인류복지세, global welfare tax

- ㉠ 인구가 많은 나라 일수록, ㉡ 군비를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 무역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 자원소비가 높은 나라일수록 ㉤ 인구 아동이 많은 나라일수록 인류복지세 (global welfare tax)를 많이 각출, 지구촌 Infrastructure건설에 쓰자는 제안이었다. 1979년이 아니라 오늘 제안했더라면 '온난

화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일수록 이 라는 항목을 추가했을 것이다. Tobin세, Thomas Piketty가 제안한 자본거래세와 같은 차원의 발상이다. (Kim Jin Hyun, 『A Proposition For The Global Welfare Tax-The road to create an intellectual environment for a new global interdependence system and global welfare for the masses』, 16th World Conference,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lombo, Sri Lanka, August 13~16, 1979)

- ④ 휴전선 인류 평화지대 (Global Peace Zone) - UN 관리아래 남북한 주권포기하고 2012 Rio+20 정상회담, '2013 UN총회를 DMZ에서 열 것을 제안. Kim Jin Hyun, 『DMZ into Global Peace Zone(GPZ)』, DMZ보전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경기도 일산 KINTEX, 2008. 10. 23)
- ④ Green Growth-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의 에너지먹거리 등 생명자원 해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지구촌 차원의 비전과 노력
 - a. 재생 자연에너지 기술
 - b.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변환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 기술
 - c. 먹거리, 에너지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 시스템(불교적 생활관행이 가장 근접한 고안일 것이다)을 동시 복합,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paradigm
 - d. 한마디로 이 땅의 흙과 물과 공기와 과학기술과 사람만으로 건강한 영양과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인간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지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결론과 지향은 ① 경제 제1주의, ② 가능성 개혁론, ③ 성공신화, 영웅사관의 종언과 극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 ④ 김진현, 「한국을 중국 일본에 대한 지식·정보 세계적 Hub화 방안」, 세계화추진위원회 제1호 안건,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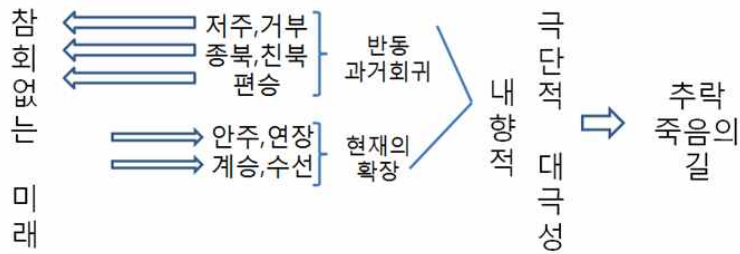
4. 세 번째 기적 만들기 위한 새 주류를 어떻게 형성 할 것인가



(2013.4.10. 로이터 연합뉴스)

바티칸에 김 반기문 프란치스코 교황(오른쪽)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일 바티칸에서 교황 주위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만남에서 세계의 분쟁상황과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과 한반도 긴장고조와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할 다짐했다고 교황청 측은 전했다. 바티칸/로이터 연합뉴스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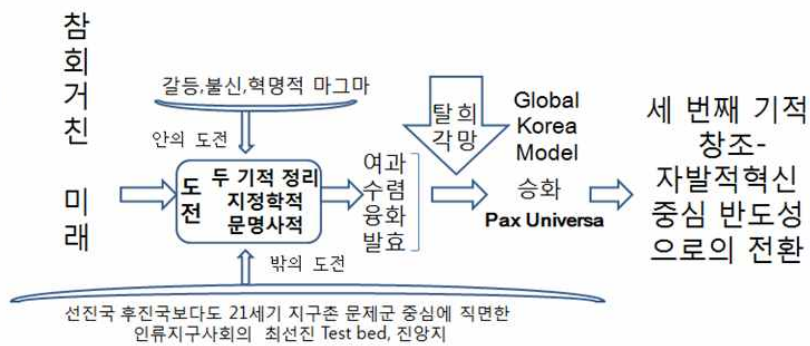
기능적 접근- 1회성 단파성(短波性)

status quo

<perfect storm>이나 아니냐 판단에서 갈림

Paradigm Shift

통합적 접근-장파성(長波性), 다원 복합적



안재홍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승훈
안종근
탄허
김용기
함석헌



방하남 고용부장관 앞-민주노동, ILO 총회 기습시위.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과 김종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우식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등 민주노동 대표단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연단 앞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기권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조 탄압 중단을 비롯해 생양치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네바/민주노동 제공

(2013.6.14 한겨레)

*상기 이미지들은 교육용 교안으로 강연장 내 에서만의 사용을 목적으로 가공/편집되었음을 밝힙니다. P

[부록1]

1.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제3세계국가들 중 유일하게 정치민주화, 시민언론자유, 근대경제성장, 과학기술의 선진화, 교육의 고도화, 사회문화적 다원성 이라는 ‘근대 기준’의 완벽한 성취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다. 김진현,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중 제2부 6장 <한국, 근대화혁명에 성공하다>, 2006, 한길사, pp.147-180
2. 김진현, 「대한민국(건국, 근대화, 1948년)혁명 그리고 21C Global Korea Model로의 승화」,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회의에서의 집행위원장 발제문, 2008.5.20, 청와대
3. Kim Jin Hyun, 『The Global Problematics of Himalayan Zone (WPIC) - Seeking Korea Model』, Special lecture,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Shangri-La Hotel, Manila, Philippine, February 10, 2014

[부록2]

김진현, 「대한민국 근대화혁명과 ‘도착적 근대화’전개 - Global Korea Model 창조로 가기위한 성찰」, 대학총장협회 세미나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육의 역할> 주제발표, 2014년 10월22일
 ‘도착적 근대화’를 A.사회병리 B.교육 C.에너지 D.국가사회공동화 등 4개 부문으로 걸쳐 나누어 악성변종현상을 설명했다.

[부록3]

김진현, 「21세기 한국의 ‘善進國化’- 장기생존비전과 황해동해 문제군」, 한국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 기조발표문 (1995.6.16~17)

“한국의 21세기 경제는 대담하게 軟性化 (Soft Technology, Soft Energy, Soft Economy)의 길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先進國을 지향하되 “善進國”이라야 한다. 富國強兵과 重化學공업 이라는 量과 規模의 지향이 아니라 格과 質중심으로, 정보, 지식, 문화, 예술, 기술 중심으로 文明史的 변혁의 체제, 질서,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나는 2020년 쯤의 한국경제는 그 부가가치 구성의 대부분이 전혀 새로운 산업, 그것도 새 정보 지식 문화 산업에서 이루어 질 것을 꿈꾸어 본다. 500명 정도의 1억 달러 小빌 게이트 같은 벤처기업인, 100명 정도의 스피버그와 임권택 같은 영화감독, 500명 정도의 정명훈과 조수미 같은 음악가. 또 500명 정도의 백남준과 최재은 같은 예술가, 100명 정도의 한국판 E. 라이샤워, J. 페어뱅크, P.케네디, P.사뮤엘슨 같은 학자. 50명 정도의 韓國版 W.리프먼, R.아롱, N.맥크레, W.크룽카이트 같은 언론인, 그리고 5명 정도라도 W. 처칠과 J.네루 같은 정치가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은 格과 質에 先進國이 될 것이다.”

1.

욕망은 있으나 희망은 없는 사회 : 성장 신화와 한국인의 욕망

원용찬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

content

1. 욕망, 성장, 희망, 발전
2. 욕망 포획과 재배치의 한국경제
3. 신자유주의 확대와 불평등, 좌절된 욕망과 미래의 불안
4. 우리 시대에 희망은 무엇인가?

1. 욕망, 성장, 희망, 발전

○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원하고 바라며 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이루고 싶다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갖는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불행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탐욕은 인간을 상대적 결핍감으로 몰아넣는다. 욕망 자체가 결여된 삶은 또한 우리를 무기력과 권태에 빠지게 만든다.

○ 자본주의와 욕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자본주의 생산은 언제나 인간을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도록 자극한다. 영어 want가 ‘결핍’과 동시에 ‘욕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핍은 욕망을 사다리꼴로 계층화시키고 조작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GM사는 자동차를 욕망의 5단계로 나누었다. 대중용으로 저렴한 시보레 → 폰티악 → 뷰익 → 올즈모빌 → 마지막 최상위의 캐딜락으로 자동차를 단계별로 줄 세웠다. 상품의 사다리를 통해 욕망도 서열화되었다.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새로운 결여’를 생산하면서 정형화될 수 없는 무의식을 욕망의 사다리로 가둬 놓는다. 이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관차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깔아놓은 궤도를 질주한다.

○ 우리가 강단에서 배우는 경제학도 끊임없이 결핍과 욕망을 만들어냈다. 표준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수단은 희소하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 수단은 결코 희소하지 않다. 다만 욕망이 무한하도록 부채질하기 때문에 넉넉한 수단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다. 결여는 희소성의 다른 말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자가 아니라 화폐다. 화폐는 무한한 욕망을 실어 나르고 간직하는 수단이다. 화폐는 무한히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결핍된 상태로 다가온다.

○ 프랑스 현대철학자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배치(agencement)로서 존재한다. 욕망의 흐름은 이웃하는 항과의 접속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한다. 입술이 마이크 앞에서는 악기가 되고 식당에서 먹는 본능으로 바뀌듯이, 우리들의 신체는 자본주의 생산방식, 화폐 추구, 희소성 등으로 배치된 이웃 항과 접속하여 무한한 욕망과 이득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기계’가 된다.

○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경제유일주의, 수출압박, 희소성(화폐 욕망, 특정대학의 엘리트 지배와 재생산, 수도권 집중), 훈육된 신체의 교육, 서열화, 차별화(이접 disjunction의 형태로서 지역과 농공 불균형, 지역차별, 약자의 배제), 노동억압 등을 계열 배치하여 사회 전체를 성장하는 욕망 경제로 전체화하였다. 국가는 개별 주체의 다양한 욕망을 성장신화의 궤도로 포획하여 고도성장의 기지로 영도화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장치가 작동하였으며, 특히 반공이념은 궤도를 벗어난 욕망을 금기시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터널사이의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 오늘날 한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부진, 저성장률,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령화, 인구감소에도 특히, 미래의 청년세대들은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 한국은 이미 고도성장의 모순이 드러나고 세계경제의 흐름과 더불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다른 종류의 욕망을 생성하는 배치가 필요하다. 고도성장의 욕망으로 배치된 영토를 탈주하려는 탈영토화의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이전의 배치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부정(negation)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으로 이어지는 접속과 생성의 선(線)을 그리는 창조적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다.

○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물적 확장과 성장(growth)의 획일적 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발전(development) 라인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3영역으로서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도 새로운 욕망의 배치이며 탈영토화 작업이다.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과 대기업만 바라보는 서열의 외연적 성장에서 탈주하여 고유하고 색다른 지역모델과 지역 순환경제의 내포적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 욕망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멈춘 사회는 위험하다. 새로운 탈주와 질주의 선으로 욕망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욕망이 억제되거나 정제된 일본의 하류 사회와 사토리(さとり) 세대¹⁾에서 보듯이 국가의 미래성장과 발전마저 가로막거나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힘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배를 욕망하는 파시즘’²⁾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욕망 포획과 재배치의 한국경제

(1) T자 구도의 압축 성장과 욕망의 삼각형

○ 한국경제에서 욕망의 포획은 T자형의 구도 속에서 이뤄진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분단의 선분에서 경부축으로 이어지는 T자는 일본과 미국의 정치경제 전략까지 포괄한다.

○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 전략은 불균형(unbalanced) 성장과 수출주도형의 외향적 성

1) 자동차, 사치품,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에도 욕심 없는 일본 청년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사토리는 ‘깨달음, 득도’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이다. 사토리 세대는 마치 득도(得道)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사는 젊은 세대로 정의된다.

2)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6, 268쪽.

장론(out-looking growth)으로 집약된다. 불균형 성장론은 전후방 효과가 높고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의 선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전략이다. 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초기 자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선택이었지만 농업 희생 또는 지역의 불균형이라는 모순도 낳게 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저임금은 도시 임금노동자의 생계비를 낮추는 저미가 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저곡가로 경쟁력을 상실한 농촌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과잉되고 다시 저임금의 노동자를 배출하는 인력생산 기지로 작용한다. 저임금 → 저미가 → 농촌 노동력의 방출과 인구유출로 지역격차가 벌어진다. 서울과 동남권 = 공업화, 서남권(호남) = 식량과 노동의 공급지대를 기초로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은 T자를 경제선으로 하는 지역불균형으로 구도화된다.

○ 외향적 수출주도 성장은 경부축과 한국 → 일본 → 미국으로 연결되는 T자 라인을 따른다(그림 1). 한국의 대외 성장전략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저렴한 임금노동과 결합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비재 생산물을 미국의 수출시장이 흡수하는 삼각 안보동맹에 크게 힘입는다.

T자 라인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성장전략의 축을 이루면서 국민들의 열정과 욕망이 질주하는 궤도가 되어 주었으며 또 한편으로 저임금과 노동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 다시 한국경제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비료, 전력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 기간산업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화학공업은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서 재벌의 성장을 낳는 계기가 된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부채누적과 부실화로 재벌 그룹에 편입되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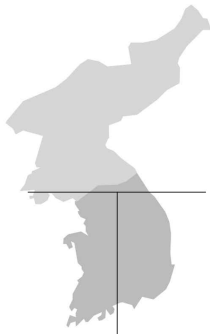
○ 중화학 공업 벨트의 입지점에 따라 동남과 서남권, 특히 호남과의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물자가 집중되는 일극 중심주의가 나타난다.

○ 지역의 분업구조에 따라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은 기획, 연구, 기술개발 기능이 집중된다. 서울은 구상(concept) 기능으로 지방은 실행(practice) 지역으로 양극화된다. 1989년에 이미 기업체 본사의 70%가 서울로 몰렸으며 급속히 발전한 금융망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부는 서울로 집중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의 불균등한 분배가 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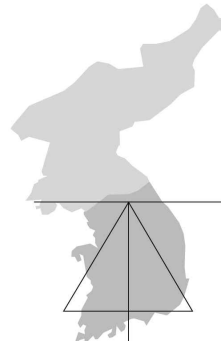
○ 국가 주도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영남지역의 패권주의와 호남세력의 배제라는 공간적 역학관계가 작동한다. 지배엘리트(관료, 정치인, 경제인 등)와 투자기업의 분포가 불균등하게 이뤄진다. 국내총생산에서 수도권이 40~50%, 영남이 30~40%를 차지하고 수도권 - 영남 두 권력으로 성장과 발전이 집중되는 국토구조의 양극화가 초래된다. 이런 구조에서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축은 저발전의 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³⁾

3) 조명래, “만들어진 불평등, 지역격차,” 이정우·이창곤 외 지음,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휴머니티스, 2015. 242-3 쪽.

(그림 1) T자 라인의 성장모델



(그림 2) T자 라인과 겹친 육망의 삼각형



○ T자형의 배치에 수도권을 꼭지점으로 하는 육망의 삼각형이 그려진다. 화폐와 권력의 희소성은 육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교육의 서열화까지 낳았다. 서울의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명문 엘리트 그룹이 사회적 지배구조의 상층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다시 재생산되는 반복구조 속에서 교육열풍은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경쟁적으로 육망의 삼각형에 편입된다(그림 2).

○ 푸코(M. Foucault)는 지식이 권력과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 역시 희소성에 기반하는 육망 창출과 더불어 호모 에코노미쿠스형(경제인)의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한다. 경제학은 인간의 육망과 선호가 미리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최소비용으로 최대만족을 얻으려는 경제인의 모델은 거꾸로 현실 인간에 투여되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한다. 순수 경제학은 갑과 을의 관계도 자본의 이윤 획득활동으로 정당화한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경제인의 모델은 따뜻한 감정, 연대의식, 도덕과 윤리를 외면하고 오직 인간의 다양한 본성 중에서 이득만을 끄집어내고 강조하고 유도할 뿐이다.

(2) 신화의 부조리, 성장 궤도의 모순

○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유일주의, 인간과 물자를 T자형의 경제성장 회로와 육망의 삼각형 속에 집어넣는 동원경제(mobilization economy)의 방식을 취하였다. 한국경제는 수출입국의 경제발전과 단기간의 압축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로 성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민주화, 국가주도의 폐해, 거대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일극 중심주의, 지역불균등 발전, 불평

등한 소득분배, 약자의 배제 등 수많은 모순을 노출하였다.

○ 오늘날 성장 신화의 재현은 영토를 벗어나 탈주하려는 우리들의 욕망을 포획하여 재배치하려는 인위적 작업이다. 신화는 초월적 존재가 마술적 힘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경제성장의 신화는 과연 실체가 있는가? 초기 절대 반군사회에서 경제규모가 적고 유희인력과 물자를 충분히 가동하여 투입과 산출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조건에서 드러난 경제성장물은 결코 신화라고 볼 수도 없다. 신화가 있다면 장시간의 노동, 저임금, 교육열정, 근면 성실과 인내로 성장연대를 일으킨 국민들의 몫이다.

○ 경제성장의 신화는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과 군사정부의 역할도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과정을 마루어 짐작하면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다만 민주적 정부, 그리고 군사정부의 강제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속도에 있을 것이다. 속도는 사후 비용을 대가로 치른다. 경제성장 못지않게 1997년 금융위기, 재벌의 비대화, 민주화의 비용 등은 후대의 부담으로 남는다.⁴⁾

○ IMF 외환위기는 경제성장의 사다리를 따라 흘러가는 욕망이 언제나 당연할 것이라는 믿음을 좌절시킨다. 자영업과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률도 높아진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국가의 공적영역과 역량이 후퇴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법칙에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한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규제완화 등이 이뤄지고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지적대로 ‘만물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everything)’가 신속히 확산된다. 만물의 상품화는 결국 모든 것을 화폐로 계산하는 화폐욕망을 더욱 부채질한다.

○ T자의 성장모형을 바꾸려는 시도로서 중국과 연계되는 동서축의 라인이 강조되고 남북협력과 화해도 시도된다. 분단과 경부축의 T자 형에서, 분단 완화와 동서축이 강조되는 플러스(+) 형태의 구도가 시도되기도 한다(그림 3). 전국적으로 중앙의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균형 정책도 이뤄졌으나 지역마다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결합하는 고유의 내포적 발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디지털 혁명, IT, 신산업, 지식경제의 창출이 시도된다. 그러나 경기의 하강국면에서 다시 성장신화의 신드롬이 일어나고 단기간의 토목형 건설이라는 시대착오의 무모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3. 신자유주의 확대와 불평등, 좌절된 욕망과 미래의 불안

4) 박태균,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 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380~1쪽.

(1) 분배의 불평등, 빈부의 양극화, 세습자본주의, 지역격차

○ IMF 사태는 국가 주도의 성장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자원배분에서도 비효율적이었음을 드러낸다. 이후 경제운용 패러다임은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체질개선 보다는 시장 중심주의, 그것도 단기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진다. 부진한 소득증가는 소비위축으로 나타나고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졌으나 정부정책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과감한 투자도 이뤄지지 못하고 사내 유보금만 쌓이게 된다. 고용 감소 → 소득 감소 → 내수 부진 → 투자 위축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 시장 중심주의에서도 국가는 게임의 룰을 정하고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와 시장’이 상호 보완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규칙도 심판도 없이 경제주체가 맹목적으로 경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름없다. 외환 이후에도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정글시장의 복합적 작용으로 빈부의 양극화, 소득의 불평등, 복지의 후퇴, 빈곤은 더욱 확대된다.

○ 2014년에 피케티(Th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분배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를 지적하였고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 준다.

한국은 해방 이후에 불평등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빠르게 높아지는 U자형의 장기추세를 보인다. 근로 소득자 상위 0.1%의 보수는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 정도를 유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등하여 최근에는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보통신 등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ical change), 기업자배구조의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상층 소득자에 유리한 세율구조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아울러 정규직에서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 골목상권의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인 노동 소득 분배율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 자산을 포함하는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 기준) 중에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다.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인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2000~2007년 2.3%에서 2010~2013년 1.7%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⁵⁾

5) 김낙년,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3~2013 :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Working Paper 2015-06, Oct. 2015.

○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하여 더 가파른 삼각형 궤도가 이뤄졌다. 2015년 현재도 국내 총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한다. 인구, 생산액, 사업체와 같은 일반기능의 50%, 지역총생산(GRDP)의 47.1%, 총사업체 수의 47.4%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첨단기능·가치창출 기능도 수도권에 약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예금액의 70%, 연구개발비의 67%, 재산세 징수액의 6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예금액, 연구개발비, 재산세 징수액, 대학평가 상위 20%의 수도권 집중(80%), 100대 기업(84%)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청년실업과 불안 : 어두운 미래

○ 지역격차, 자산금융소득의 격차, 주거의 불평등, 조세의 불평등, 교육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학의 서열구조 등으로 미래 한국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어오르기도 벅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어릴 적부터 결정되는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차별적 출발선’에 더욱 불행해하고 있으며 이를 분노하기 보다는 기존 질서와 현실에 훨씬 더 수용적이고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역설까지 낳고 있다.⁶⁾

○ 청년들에게 화자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이미 우리사회가 피케티가 우려하는 불평등의 세습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미래지향의 흐름(flow, 소득)은 소실되고 과거와 스톡(stock, 자본)에 의존하는 퇴행성이 점차 한국사회를 어둡게 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느 설문조사에서 59%가 생활비도 스스로 충당해야 되는 ‘흙수저’라고 대답했다. 금수저(2.5%) 보다 24배가 많았다. ‘흙수저’ 계급의 63.8%는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계층이동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계층의 상승 이동통로가 차단되고 블로킹화되어 있어서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이 심각한 상태에 와있음이다.

○ 서울의 세칭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최고 소득층의 자녀는 40% 수준인 반면에 소득 하위 10%가정의 자녀는 8.7%로서 4년제 대학 평균의 12.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민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성인 남녀는 20대가 77%, 30대가 84%, 50대가 65%로 나타난다. 이민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이유로는 40%가 ‘갈수록 빈부격차와 소득불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구직 단념자는 53만 9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8만 5000명이 증가했다. 구직 단념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현재 한국의 공식 청년실업률은 9.7%이지만 체감실업률⁷⁾은 22.4%로 두 배 이상이 높다. 현재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는 45만 명이지만 체감실업률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자는 116만 명으로 추산된다.

6) 최장집, “청년취업과 청년들의 대응,” 이정우·이창곤 외 지음,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2015. 165쪽.

7) 체감실업률이란 공식실업률에 잡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로서 시간관련 추기취업자,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층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니트족(NEET)의 비중은 15.6%(2013년 기준)로 집계된다. 전체 회원국 중 3위이며 회원국 평균(8.2%)보다 7.4%나 높은 수준이다.

○ 지금 청년세대들은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포기),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의 포기)에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의 절망까지 드러워지고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헬조선의 자조와 분노마저 표출되고 있다.

○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의 마지막 욕망은 '먹방'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신분의 상승과 순환은 막혀 있고 부자가 될 가능성은 커녕 부의 재분배조차 왜곡된 상태에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채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데 희망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20통의 이력서를 내보지만 번듯한 직장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본능적 욕망뿐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욕과 식욕만 남는다 … 여기서 실현가능한 욕망은 식욕뿐이다.”⁸⁾

(3) 가까운 일본의 청년 세대와 하류사회, 절망

○ 일본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생산 사이클이 빠르게 단축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축소나 노동력의 양적인 유연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IMF 위기나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적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카이[団塊] 주니어 세대 이후의 청년들은 기득권층에 밀려 노동시장의 진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현대 일본의 청년층은 부모세대가 일궈놓은 물질적인 풍요가 소비위주 문화를 형성시켜 주었지만 그것이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청년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동관에 서도 차이가 난다. 물질적인 만족을 중시했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청년층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욕망의 고도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층에게 자아분열을 가져오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히키코모리(병적 은둔)나 무기력, 범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된다.

○ 일본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은 물론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는 열등의식이 형성되면 사회는 상층계층과 하류계층으로 극단화되는 모래시계 모양의 형국을 보이게 된다.

한국사회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하류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

8)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의 마지막 욕망은 ‘먹방’”『한경비즈니스』, 1025호(2015. 7.29), 60-61쪽.

직, 아르바이트 생계 등으로 중하류 계층(Lower-Middle Class: 중류의 하층)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IT산업 등 부유한 중상류(Upper-Middle) 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M자 형태로 빈부의 양극화를 보인다.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하류사회에서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소비행태가 엿보인다. 그 중에서 “옷 입는 패션은 내 방식대로 한다”는 소비양식은 중하류계층이 모방할 에너지와 의욕도 갖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⁹⁾

○ 사회구조의 양극단화는 두 개 본성을 통합 보다는 대립적 분열(splitting)로 진행시킬 우려가 많다. 경쟁적 소비모방의 폭포를 타고 지위상승을 꾀하려는 의욕이 포기된 자리에, 종전의 상승의욕은 자기비하로, 선망과 부러움은 적대적 증오로 바뀌게 된다.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소비사회에서 파악했던 사회 안정이론으로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층이 적대적으로 대립하여 사회를 파괴하지 않았던 것도 결국 경쟁적 모방(emulation)에 따른 인간행동의 결과였다. 유한계급 또한 과시적 소비과정에서 하류계층의 소득과 가용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사고습관을 전파함으로써 보수화시켜 나간다. 상대적 궁핍감과 박탈감이 사회적 개혁의 주도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베블런은 분석한다.¹⁰⁾

4. 우리 시대에 희망은 무엇인가?

(1) 대압착 시대와 대전환을 위한 정치경제 전략

○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은 1932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에 대규모의 뉴딜정책을 통해 불평등과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의 출발조건을 마련했던 시대를 특징짓는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제도 개선, 사회복지의 제공, 부자의 세금과 기업의 법인세 증세, 저소득층에게 식비 제공, 의료보험의 도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등이 이뤄진다. 이후 미국 사회는 최상층과 최하층의 계층구조가 줄고 중산층 중심의 압착된 모양을 띠었다.

9) 미우라 아츠시, 이화성 옮김, 「하류사회 : 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6,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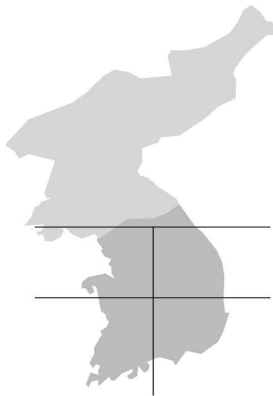
10) 원용찬, 「유한계급론 : 문화, 소비, 진화의 경제학, 살림, 2007, 151쪽.

○ 한국은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불완전하나마 자산의 재분배와 계층 간의 이질성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농업생산성 상승과 농민소득의 증가, 농촌의 도시 산업노동력 육성 등으로 이후 고도성장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세계적으로 이 시기는 피케티가 말하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추세곡선인 U자의 하강국면에 해당한다.

○ 1990년대 이후 T의 경부축과 수도권 집종의 삼각형(△) 모양이 겹친 성장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소득의 불평등, 중산층의 붕괴, 고용 정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양극화의 현상을 넘어 '예속과 식민지'의 성격마저 낳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규제완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중국의 일반성도(省都)보다도 국제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U자 곡선으로 상승해가는 각종 불평등을 다시 하강시켜서 W자 형태로 바꾸어 한국경제가 각종 불평등과 예속, 독점과 집중, 불공정과 비민주적 형태의 고리를 단절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L자 구도의 재분배와 복지정책(제2의 불평등 완화 단계)과 플러스(+, 정부와 동서축의 발전 궤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네모(□)의 구상을 대압착의 차원에서 디자인해야 한다. '압축 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압착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전환의 발상과 실천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갈등과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림 4).

(그림 3) 정부와 동서축의 성장모델



(그림 4) 대압착, 내포적 발전과 분수효과



(2) 저성장 시대, 욕망의 분산과 다양화, 제3영역의 확대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3.4%에서 3.1%로 하향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2%의 수치가 지 제시된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도 같은 추세다. 경제 성장주의라는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 고도성장에 기반하는 욕망과 현실적 욕망과의 괴리는 심리적으로 각종 사회적 일탈과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아도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었다. 2%대의 저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 각자가 인간 행복과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 성장궤도에서 이탈된 욕망의 삼각형 포획과 집중에서 벗어나 탈영토화의 지점으로 탈주하여 새로운 접속과 생성의 선을 그리도록 해야 한다. 오직 서열화, 물질, 출세, 쾌락과 접속하는 욕망하는 기계에서 탈주하여 이웃, 자연, 사람, 가치와 접속하여 사람마다 다양한 욕망과 행복을 얻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거기에서 창조, 생명, 생성의 선이 그려진다.

○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에서 수목(樹木)모델과 리즘(rhizome) 모델을 제시한다. 수목 모델은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과 뿌리로 귀착하며 위계적 질서를 보여준다. 땅 속 줄기 식물을 뜻하는 리즘 모델은 이런 저런 줄기들이 어떤 중심 뿌리 없이 분기되고 접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리즘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가며 무한한 연결 접속을 창조해낼 수 있는 내재적 원리이다. 네트가 바로 리즘이다.” 성장 중심의 수목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접속으로 새로운 영토를 창조하는 리즘모델로 이행해야 한다.

○ 고도성장의 궤도가 낳은 불평등한 분배와 불균등한 지역발전은 항상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번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발전과 색다른 경제모형의 발전, 지역과 소득 불평등의 압착, 복지, 내수확대 등을 통한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에 방점을 뒀다.

○ 시장중심(경쟁, 효율, 자동적인 시장메카니즘)과 자본주의(무한 욕망과 생산, 자본과 이윤중심)라는 고정적 틀에서 벗어나 비시장경제 영역, 그리고 탈자본주의의 시선에서 인간/인간과 인간/자연이 서로 공생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일하는 보람이 창출되는 이웃 향의 접속이 배치되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제3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가꾸기, 도시공동체 등의 새로운 접속과 배치가 늘어나도록 한다.

(3) 새로운 상상력, 욕망과 희망

○ 남북분단의 T자형과 삼각형의 욕망에 포획된 상상력의 굴레를 벗겨내서 자유, 민주, 창조, 지식, 꿈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 동안 우리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분단모순의 좌우에 묶였고 성장 사다리에 갇혀서 언제나 당나귀가 눈앞의 당근만 바라보고 가야하는 터널시아에 가려져 왔다. IT와 디지털 혁명, 지식기반 산업, 차세대 스마트산업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상상력과 모험으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재창출이 필요하다.

○ 통일한국에 대한 의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좌우 또는 이념논쟁에 가두어진 상상력과 비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한 분단 대립의 비용을 줄이고 통일 상생의 틀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복지, 교육, 사회투자, 기본소득 등과 같이 인간 삶과 미래 청년을 위한 자원배당으로 돌릴 수 있다.

○ 청년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인간 삶과 미래 청년을 위한 자원배당으로서 제시되는 기본소득¹¹⁾은 현재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역화폐와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형태(분기별 25만원)로 지급되어 미래 청년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지역생산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낳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화폐 공급의 주체가 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험으로 전망된다.

○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청년세대의 실업과 비정규직이나 실질적인 실업군들은 점차 체념과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점차 개인화되고 나르시시즘에 빠져가고 있다. 교육과 사회화의 결과로서 기존 체제에서 이탈하지도 못하고 순응하는 보수적 경향도 나타난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절망하면서도 행복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절망은 체념이며 거기서 얻는 자족적이고 물질을 대신하는 정신적인 욕망 충족은 자폐적 희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는 행복은 자기위안일 뿐이다. 더불어 살아가며 타인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연대 속에서 이뤄지는 행복과 희망을 우리는 소망한다.

○ 속도의 성장은 한국사회 전체를 타인과 경쟁하고 익명의 물량적 크기를 키우며 앞만 보고 직선으로 달리는 선이다. 곡선의 발전은 조금 느리지만 지역마다, 마을마다, 공동체의 영역을 키워가며 함께 어우러지고 “친밀하고 유대적인 사람들의 관계가 성숙되면서 돈, 자원, 에너지가 순환하고 재생되는 것을 미래 모습으로 한다. 이것이 내재적 발전이다. 여기서 색다른 경제모델이 제시된다.”¹²⁾ 이윤과 물질의 생산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속에서 젊은 미래의 희망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¹³⁾

11)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소득 개념에 내포된 기본 메커니즘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인별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으나 현재 이념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국가마다 높은 수용 가능성을 보여 왔다.

12) 신승철, 「욕망자본론」, 알렙, 2014, 86~7쪽.

2.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국 현대사 조망과 성찰

박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content

1. 해방 후 70년, 기회와 위기의 교차
2. 반복되는 위기의 사례
3. 왜 위기는 반복되고 있는가?
4. 성찰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1. 해방 후 70년, 기회와 위기의 교차

한국현대사는 1945년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방은 35년간의 식민지가 끝나면서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었다. 승전국의 식민지가 식민지적 상황에서 바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전쟁을 겪어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민족자결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체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조선왕조의 부활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정제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구 제국보다 민주공화제의 도입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긴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주의 체제와 공화정 체제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곧바로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분할점령이 이루어졌고, 임시정부는 물론 모든 독립운동 세력의 공헌과 역할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방 직후 한국인들이 스스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한반도는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은 곧 1948년 분단 정부의 수립, 그리고 그 2년 후 전쟁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세계정세와 미국과 소련의 대한정책을 오독했던 국내 정치세력들의 잘못도 있었다.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위기를 양산해 냈다. 우선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됨으로 인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과 북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이러한 갈등은 남과 북의 사회에 위기를 조성했고, 안보위기는 양측의 정권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적대적 공존관계를 통해 남과 북에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개개인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이는 개개인의 안보에 끊임없는 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단과 독재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남한의 경우 분단과 체제 경쟁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국은 자유시장의 강대국들로부터 무역에서 많은 기회와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1945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까지도 Global South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국가들이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

은 196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성장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높은 대외무역 의존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의 경제적 조건이 안 좋을 경우 한국에 그 영향이 곧바로 전달되었다. 1960년대 후반 달러와 금 위기,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1997년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위기는 계속 반복되었다.

탈냉전과 민주화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시장경제의 정상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속되는 부정과 비리, 재벌 편중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체질은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는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일정한 발전과 체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1945년 이후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곧 위기가 왔고,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기가 만들어지고 반복된 것일까?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그와 비슷한 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 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위기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2. 반복되는 위기의 사례

1) 정치적 사례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열망은 1950년대부터 민주주의적 헌법이 마련되는 1987년까

지 계속되었으며, 1987년 이후에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정치와 시민 사회는 수없이 비슷한 유형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19 혁명과 장면 정부의 위기는 민주적 정부가 채 1년도 지속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와 동일한 경험은 1980년과 1987년 재현되었다.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 기회는 급속한 민주화를 완하지 않는 세력들에게 넘어갔고, 민주화는 다시 요원한 과제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회 역시 그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

왜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기회를 위기로 만든 데는 정치세력과 시민 사회가 눈앞의 이익을 쫓으려다 대의를 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기회를 놓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해방 직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좌익세력은 내부에서 박헌영과 여운형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1960년 민주주의 시대에 집권했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의 싸움으로 분당을 경험했다. 1980년과 1987년 양김씨의 분열은 민주화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자 민주 정부의 수립이라는 대의를 망각해 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4.19 시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사회운동세력들, 1980년 양김씨의 분열에 대응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세력, 1987년 양김씨의 정치적 욕망에 휘말려 후보단일화 진영과 비판적 지지 진영으로 나뉘었던 시민운동 세력은 모두 이러한 위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편 민주화 이후의 위기는 잘못된 정치적 경험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1987년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은 후보 단일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주화 운동 세력 내에서의 단일화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1997년 대선의 DJP 연합과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야당과 한국 사회의 비주류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분열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단일화’에 올인하게 되었다. 단일화에 차중하면서 실상 정치권은 정책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동안 오히려 집권세력이 선거에서의 모든 정책과 쟁점을 독점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충실한 준비보다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벤트에 집중하는 관행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의 과정에 대한 준비 부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2) 경제적 사례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야 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몇 차례에 걸친 큰 경제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1969년의 외채위기는 심각한 부실기업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비서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1972년 8.3조치로 마무리되었다.

8.3조치로 인해 1972년과 1973년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1979년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맞는다. 이 시기의 위기는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 그리고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198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 세계 4대 부채국의 하나였으며, 한국 경제가 파산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한국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 수용,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그리고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3저호황이었다. 3저 호황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유가의 하락으로 수입 비용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더하여 1980년대 말 냉전체제 붕괴와 함께 시작된 북방정책으로 해외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개발독재 기간을 통해 보호주의와 국내 시장 독점, 그리고 보조금으로 허약해진 한국 기업의 체질은 1990년을 전후 시장개방을 통한 국제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버텨내지 못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았다.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부채,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로부터 외화의 유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1997년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초에 이어 한국이 또 한 번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의 위기는 1998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부양 정책과 미국 및 IMF의 구제금융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 사회적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왔고, 이러한 위기는 지속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 1945년 이후 70여년의 역사 동안 정치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한국 사회 내에서 항상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위기가 정치, 경제적인 요인 외에 사회, 생활적인 부문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2008년의 광우병 파동, 그리고 2011년 세월호 사건은 정치/경제적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위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인재 사고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의 사회적 사고가 태풍 사라호 피해(1959년)와 같이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사고는 대부분 부실사공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에 의해 발생했다.

1970년 와우 아파트 사건은 사회적 대형 사고의 시작을 알렸다.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천동의 와우 아파트 15동이 무너지면서 3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연각 호텔 화재(1971년), 서울 시민화관(현 세종문화회관) 화재(1972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1974년), 이리역 폭발 사고(1977년), 대아호텔 화재(1984년),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고(1987년)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급기야 1990년대 이후에는 사상자 수가 200여명이 넘어가는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1995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2005년) 등이 계속되었다. 즉, 지난 70년 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공간 자체에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위기의 정점을 찍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 행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19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때부터 학교 관련 행사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최악의 사고가 재현된 것이다.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이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4) 안보 위기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위기는 안보 위기였다. 특히 안보위기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때로는 실제 위기보다도 더 증폭되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안보위기는 징병제와 함께 예비군과 민방위로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피

부로 다가오는 가장 항상적인 위기였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미 1950년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보위기는 단지 정부의 선전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다.

안보 위기는 1953년 이후 한국 사회에 항상적으로 다가왔다. 그 근본적 원인은 분단체제 위에서 정전 협정으로 인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남북 사이의 적대행위를 막기 위한 협정이었지만, 적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협정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의 일부는 무효가 되었다. 또한 정전협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전협정을 조인할 당시 이 협정이 60년이 넘도록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현재 남북 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기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왜 위기는 반복되고 있는가?

1) 성찰이 없었던 70년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지난 70년 간 한국 사회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도대체 이런 위기들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찰이 이루어졌다면, 비슷한 유형의 위기가 지속될 수 없다.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들 때마다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7년 단일화의 실패로 민주화의 기회가 위기로 전환되었을 때 양김씨뿐만 아니라 두 야당 지도자에 대한 지지 여부로 갈라졌던 시민사회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화되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졌다. 시민사회가 정치화될 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면 성찰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거듭되는 경제위기는 1960년대 말의 경제위기에 대해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72년 8.3조치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전쟁 때에나 있었던 긴급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밝혔다. 이 선언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으로 “허다한 기업들이 사채의 질곡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일부의 기업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위장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선량한 기업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정화라는 전지에서도 마땅히 광정되어야 하겠습니까”¹³⁾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업인 여러분, 나는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인들은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이 조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곧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이며 기업의 건실한 성장없이는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근본 취지를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 한편 나는 이 조치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인들의 노력과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및 위장사채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다.¹⁴⁾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기업인들의 자세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찰은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는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만들었고, 1990년대 말에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무제한 확장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정부도, 기업도 과거의 경제위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성찰이 없었던 데에는 다른 한편으로 8.3 조치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던 데에도 있다. 기업들의 채무가 늘어난 데에는 차관으로 들어온 돈을 생산라인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는 정부의 자불보증을 통한 차관 도입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장사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장사채를 출자로 전환시켜주면서 기업들에게 사면을 했고,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았던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각 기업들을 조사한 내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모두 8.3 조치로 사면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오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아울러 경제위기 직후에 온 중동 건설 붐과 3저 호황과 같은 세계 경제 조건의 변화는 성찰 없이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도 와우 아파트 사건은 성찰이 없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사건 후 관련 공무

13) 동아일보 1972년 8월3일자 “박대통령 특별담화문”

14) 졸고, 8.3 조치와 산업합리화정책, 역사와현실 88호, 2013 참조.

원 4명과 시공업자 1명을 구속하고 사고 8일 만에 서울시장도 교체되었다. 또한 서울 시내 406개 동의 시민아파트에 대한 일제 진단에 들어가 61개동에 결함이 있는 것도 밝혀냈다.¹⁵⁾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시장직을 물러난 김현옥은 다시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사소가 발생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와우아파트 다동 뒤의 높이 3m 축대가 또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¹⁶⁾ 1984년에는 2동 뒤편의 와우산이 무너지면서 204호와 205호를 덮쳐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¹⁷⁾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은 준공검사를 통과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형적인 인재였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시민화관 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왕코너, 대아호텔 화재사건이 잇따랐다.¹⁸⁾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그 사고와 사후처리에 대한 백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없었다. 사고로부터 제대로 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2) 잘못된 성찰을 했던 70년

성찰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환상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DJP 연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반면 분열되었던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의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정권을 잡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단지 선거에서의 승리에만 집착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DJP 연합이 계속되었던 정권 초기뿐만 아니라 DJP 연합이 깨졌던 집권 중후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었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30년이 넘도록 정치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도 15년의 정치 경력이 있었지만, 정부 전체를 이끌기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내내 준비되지 않은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정권 재창출의 실패로 이어졌다.

잘못된 성찰의 대표적 경우는 안보 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북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

15) 동아일보, 1970년 4월11일자

16) 경향신문 1970년 7월4일자

17) 동아일보 1984년 9월1일자

18) 졸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3, 393-395쪽

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대한 비난과 국민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내 놓았다.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교훈으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안보위기에 대한 성찰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전체제 자체에 대한 성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정전체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정전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성찰을 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라면 압박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북한 정권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과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했다. 남북관계가 계속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적절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교훈만이 언론을 통해 나타날 뿐이었다.

잘못된 성찰의 대표적 경우는 베트남 파병이라고 할 수 있다. 남베트남 정부가 패망하기 하루 전인 1975년 4월29일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는 우리에게 더 없이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특별 담화는 1) 공산주의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하고, 2) 강대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추구해야 하며, 3)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하나로 뭉쳐 총력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⁹⁾

담화에 나타난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었다. 남베트남 정부가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았고, 미국을 너무 믿고 있었으며, 사회 내부에 반정부 시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찰이 필요했다. 첫째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은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성찰해야 했다. 5,000여명의 소중한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사망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군인들이 부상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이길 수 없고, 정의가 아닌 전쟁에 대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해서는 안 되었다. 판단 실수였다.

둘째로 남베트남 정부와는 달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성찰을 해야 했다. 한국 정부의 담화문에 나타난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하나로 뭉쳐 총격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이 지키고 싶은 정부가 되어야 했다. 남베트남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부정부패는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고 싶지 않은 정부를 만들었고, 그 결과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규모 파병과 지원

19) 한겨레, 2015년 4월4일자

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통해 국민들이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었어야 했다.

4. 성찰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는 1945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성찰을 했더라도 잘못된 교훈을 통해 성찰한 경우가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계속되었고, 수많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건 사고는 성찰이 없었던 현대사의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국회와 언론은 베트남 파병의 전쟁특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전후 재건을 통해 전쟁특수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파병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는가? 한국 정부가 이라크로부터 어떠한 특수를 얻었는가? 사실 베트남 전쟁 당시와 지금 미국의 전쟁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은 참전 동맹국들의 비용을 모두 담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베트남 참전의 결과가 참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IS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개입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역시 인재였다.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사고 후 구출 및 처리과정에서도 인재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사고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과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서는 만들었는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가?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보수 언론의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몇몇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정확한 백서들이 발간되어, 모든 국민들이 이를 보고 교훈과 성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한 정치적 이용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작동한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¹⁹

3.

우리 밖의 북한, 우리 안의 북한,
그리고 중복 엑소시즘

이대근 | 경향신문 논설위원

content

- I . 우리 밖의 북한
- II . 우리 안의 북한 1- 안보 정치의 일그러진 풍경
- III . 우리 안의 북한 2- 종북 악령 추방
- IV . 대안

분단 70년이면 통일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어도,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북한 붕괴, 북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한 통일준비론이다. 통일준비론은 북한을 배제하고 식민화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배제하고 식민화하는 주체인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담론이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통일의 주체로 나설 자격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통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을 만큼 건강한 사회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세 개의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 정권, 우리 내부의 안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의 북한, 우리의 일부가 되어 버린 종북이 그 것이다.

오랜 냉전기 남북관계 단절의 시기에 북한은 우리와 분리된 대상이었고, 그 때문에 북한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은 우리 내부에 들어왔고, 남남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I . 우리 밖의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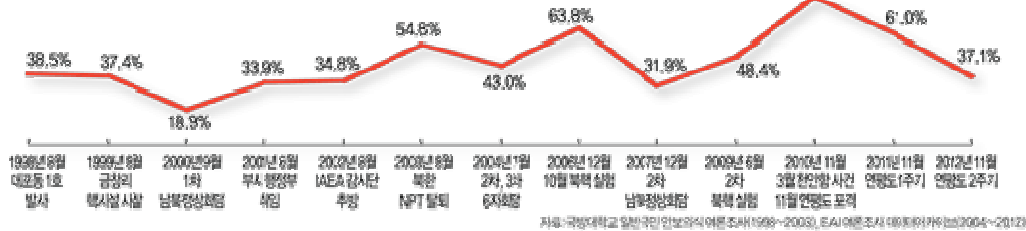
1. 북한 위협 인식- 안보 불감증인가, 안보 과민증인가

한국인이 안보 불감증이라거나 안보 과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 위협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반응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 사실 어느 정도의 반응이 적절한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보 위협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위협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탄력적인가를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2006년 12월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했을 때 안보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8%였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때는 66.8%를 기록, 2000년 이래 가장 큰 안보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20대 72.0%로 가장 높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는 81.5%가 한국의 안보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하

다고 응답했다. 이후 북한이 추가 위협 조치를 하지 않자 안보 불안감은 낮아졌다. 그러나 3차 북핵 실험 때인 2013년 4월 조사에서 70.6%로 다시 증가했다.²⁰⁾

〈그림 1〉 시기별 안보 체감도 변화: '전반적으로 안보 상황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



〈그림 1〉은 안보 불안감이 북한이 위협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고 위협 감소 때 낮아지는 등 위협상황에 따른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 위기 수준과 상관없이 과민 반응하거나 불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례 통일의식 조사도 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에 대해 2009년 응답자의 61.3%가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0년 74.3%, 2011년 73.8%, 2012년 80.7%, 2013년 78.4%, 2014년 89.4%, 2015년 84.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위협 수준을 높여온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안보 위협 인식을 안보 과민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안보 불감증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북정책 인식- 보수 대 진보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는 점차 수렴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의 2015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5.24 조치 해제에 찬성 27.4%, 반대 14.7%로 찬성이 매우 높다. 대북 전단살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45.4%, 반대 21.8%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은 50%를 상회했다. '정부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데 동의한다' 비율

20) <EAI 여론브리핑 제132호>, 2013년 5월 23일; <EAI 여론 브리핑 제78호>, 2010년 5월 3일; <EAI 2013 정치안보의식 조사-안보위기와 한국인의 안보의식>.

은 2008년 50.3%, 2009년 54.1%, 2010년 65.7%, 2011년 66.0%, 2012년 58.7%, 2013년 63.7%, 2014년 69.4%, 2015년 67.4%로 나타났다. 남북 합의가 다음 정부에 의해 부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지지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2015년의 경우 진보 61.2%, 보수 55.4%로 6%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59.8%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64.6%가 관광 재개 입장을 표명, 5%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한 보수, 진보간의 의견 차이는 연도별로 2010년 12%, 2011년 22%, 2012년 16%, 2013년 9%, 2014년 7%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5.24 조치 해제를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진보는 32.9%, 보수 28.7%로 3.2% 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2013년 1월 초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지 말고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남북대화 우선론에 대한 지지가 62.1%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북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비핵화 우선론 지지는 33.3%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유리하다'는 보수의 접근법에 대한 지지가 76.6%,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유리하다'는 탈미자주론에 대한 지지는 19.0%에 불과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북핵 해결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우선하라는 '보수적 대화론자'는 57.9%에 달했다. 반대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보적 한미동맹론자'가 67.1%나 되었다.

또한 남북 이슈와 한미 관계에 대한 태도를 서로 교차해보면, 한미 공조와 민족 공조를 대립적으로 보는 주장보다 이를 병행하라는 변형된 안보의식이 확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핵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전통적 보수 의견은 전체 국민의 28.7%, 반대로 한미 동맹의 의존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선행하라는 전통적인 진보 시각은 12.9%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이분법 구도에서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유권자들은 41.6%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북핵 문제와 관련 없이 대화를 재개하라는 점에 서는 진보적 견해이지만, 한미 동맹은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을 밝힌 병행론자가 무려 51.3%에 달한다.²¹⁾

3. 수렴 혹은 사회적 합의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과에 대한 여전한 지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21)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사사인 292호>, 2013년 4월 15일.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로서의 효용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북한이 위협적 태도를 드러내면 북한위협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북한이 대남 위협 정도를 낮추면 위협 인식은 낮아지므로 안보 불감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도 완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 관계 단절과 대립으로 남북 상호 적대감이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부상했던 화해 협력 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잦아들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시선이, 그것이 대화의 필요성이든, 북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이든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특정한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 일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우리 안의 북한 1- 안보 정치의 일그러진 풍경

1. 전시작전통제권 무기 연기- 보수가 안보정치 하는 방식

전시작전통제권 사실상 무기 연기는 한국 군대의 작전 능력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전작권 사실상 무기 연기는 안보를 안보 차원에서 다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무현정부는 2012년 4월 17일 마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일정한 시점이 아닌 조건이 충족될 때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건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의 증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미 전작권 환수 능력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27일 국방부가 공개한 보도 자료를 소개하면 이렇다. "당초 예정대로 전작권 환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환 작업은 65% 진척되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2012년 4월 전에 예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2012년 국방백서도 74쪽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적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전작권전통제권 전환(2015년) 이전에 모두 완성할 예정이다.” 2006년 알렉산더 버사바우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군의 작전수행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온 이상 작전권 이양을 늦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전작권 행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2009년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여 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수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미군이 보완 전력을 제공하면 되는 일이다.

박대통령은 이같이 환수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증대를 이유로 환수를 미루면서 그 방법으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한 전환을 제시했다. 위협 수준과 대응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정치적 결정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보수층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지지층의 불안 달래기를 우선시 했다. 둘째, 박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문제를 안보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냈다.

2. 북방한계선 포기 논쟁- 보수의 안보 검열권 행사

2002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허위 폭로로 대선 시기는 물론 그 이후 1년 이상 정치권의 최대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논쟁을 끝냈다. 있지도 않은 포기 발언을 두고 1년 이상 국가적 의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세력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방장관으로 회담에 참여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침묵하고, 전모를 알고 있었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야 공세에 가담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기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이 논쟁이 안보 이익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안보 이익을 해친 안보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이 던져주는 진정한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안보를 중시한다는 집권세력이 북방한계선의 관할권이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이전 집권세력에게 압박함으로써 스스로 안보 이익을 해쳤다는 점이다. 둘째, 북방한계선을 대화의 선이 아니라, 대결의 선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북방한계선은 남북간에 합의한 바 없는 일방적인 경계선이다. 그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 경계선을 재설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서해 바다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공동 어로 수역 설정 등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대화의 장이 아니라, 대결의 장으로 변모했다. 북방한계선에 ‘피로 지킨 국경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평화의 가치를 배제한 채 파를 요구하고 파를 부르는 군사적 대치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셋째,

보수는 여전히 진보세력에 대한 검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한 세력에 대해서도 반공, 반북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보수로부터 인증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상 검열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검열권이 검열 결과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이다.

3. 북한 무인기 소동- 야당의 안보정치

2014년 4월 장난감 수준이라는 조악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야당의 대응은 안보 정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야당은 무인기 등장으로 한국의 방공망이 뚫렸다고 여당 보다 더 과장된 주장을 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2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첫 논평을 낸 이래 11일간 무려 10건이나 같은 주제의 논평을 냈다. 4월 7일에는 하루에만 무인기 관련 3건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거의 매일 ‘뽕 뚫린 방공망’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렸다’ ‘무책임한 안보태세’를 반복하며 안보위기론을 띄웠다. 논평 중에는 “폭약을 장착해 자폭 공격용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간담이 서늘하다”며 자극적인 공포 조장 표현도 있다.

안보 불안과 공포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보수세력의 안보불안 심리 부추김에 야당이 장단을 맞추며 불안을 확산시키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무인기로 인한 안보 불안 심리는 야당이 보수언론, 여당과 공조해 빛은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가세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안보 불안은 첫째, 저고도 레이더 도입이 증명하듯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고, 둘째 마땅히 관심 받아야 할 곳에 관심을 쏟지 못하는 정치의 실패를 유도한다.

4. 안보 없는 안보정치

한국 사회가 대북 정책 혹은 북한 위협인식에 대해 의견 수렴해가고 있는 상황과 달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안보 논쟁은 매우 분열적, 갈등적, 양극적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안보 현안이 안보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남한 내부 정치의 도구로 동원된 결과이다. 그 어떤 쟁점도 안보의 얼굴을 하고 국내 정치의 영역에 불러나오는 순간 격렬한 대결 정치를 초래한다.

‘안보 없는 안보 정치’는 당연하게도 안보 이익의 관점이 아닌 이념과 당파의 관점이 중시되고 그로

인해 안보 이익을 해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정치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한 공론의 형성도 가로 막는다. 전작권전통제권 무기 연기,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시비, 북한 무인기 등장에 따른 방공망 구명 논쟁은 겉보기에 안보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위해 북한을 호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국내정치적 자원, 그것도 매우 강력한 정치 도구이다.

Ⅲ. 우리 안의 북한 2- 종북 악령 추방

1. 종북이란?

정의되지 않는 종북

성남지방법원은 종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종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맹목적으로 찬성하고, 북한의 정권 세습이나 인권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이나 언행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북은 이 같은 한정된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다.²²⁾

종북은 정교한 이념도 논리체계도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혐오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막연한 멘탈리티 뿐이다. 단지 종북이라고 호명하는 맥락과 그 맥락에 담겨 있는 특정한 멘탈리티, 감정, 심리학적 현상만이 있는 것이다. 적대라는 관계²³⁾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개념이다. 이게 바로 종북론의 한계이지만 힘이기도 하다. 종북은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규정될 뿐”²⁴⁾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아도 되며 바로 그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현상 혹은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진다. 종북이 구체성을 띠다면 광범위한 현상에 적용하며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속

22) 성남 지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북 개념의 확장을 비판했다. “비록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온화한 정책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불신하는 것,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것,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 외관상 종북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들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등으로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종북의 통상적 의미를 위와 같이 확대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23)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담론,’ <역사문제연구 제27>호, 109-139쪽.

24) 박영균, ‘종북이라는 기표가 생산하는 증오의 정치학,’ <진보평론 63호>. 4쪽.

성을 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종북은 보수가 진보를 공격하기 위한 창안해 낸 개념이 아니다.²⁵⁾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다면 대중적 확산은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진보의 언어를 보수가 차용했기에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언어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고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종북이 보수가 반대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조어였다면 벌써 용도 폐기되었을 것이다. 진보의 언어이고 진보가 보증했기 때문에 일상 언어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종북의 유행은 진보 내부 논쟁이 외부인 보수세력을 불러들인 결과이다.

호모 사케르, 혐오 표현으로서의 종북

종북은 북한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란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나 산업화 시대의 발전우위가 선보였던 것과 같은 강력한 절대적인 적대가 제거된 시대에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타자화의 정동(情動/affect)”이다. 따라서 “혐오 발언은 발언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해 버리는 행위이다. 발언자는 자신을 주류사회의 정체성에 동일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자를 그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을 인간의 영역에서 탈각시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모호한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모멸과 수치심이라는 또 다른 정동(情動)에 호소하는 일종의 집단적 폭력의 발현태인 것이다.”²⁶⁾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북한이 안보의 대상일 뿐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북한이란 무섭기 보다는 짜증스러운 존재이며 위협적 이라기보다는 혐오스러운 대상이다. 이러한 표상 속에서 북한은 열등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들, 그래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에 계열화된다.”²⁷⁾

이 북한에 대한 혐오는 우리 안의 북한, 종북을 상대할 때 증폭되고 심화된다. 한국사회의 혐오집단 분포에 관한 한 조사는 흥미롭다. 여러 사회 집단 가운데 종북세력을 혐오하는 비율이 44.7%로 가장 높다. 그 다음 동성애자 21.5%, 뉴라이트 10.1% 특히 종북 혐오는 19-29세가 45.8%로 평균 보다 높다.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종북은 가장 싫어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관용 수준 역시 연령 및 보수 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²⁸⁾ 종북 동원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조사이다.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어떻게 죽어도 정당화되는 부정한 존재로서 새로운 호모 사케르²⁹⁾이다.

25) 2001년 12월 21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간 이념 논쟁 과정에서 사회당의 원용수가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세력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되었다.

26)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32)>, 2015.5, 31~35쪽.

27) 정정훈, ‘혐오와 공포 이면의 욕망-종북 담론의 실체,’ <우리교육>, 2014.3.

28) 임재형, 김재신,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29(1)>, 2014.5, 159쪽.

29) 아감벤(G. Agamben)에 따르면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낱말의 의미와 달리 고대 로마법에

2. 종북 엑소시즘- 배경과 위험성

보수의 불안

보수는 분단 70년 동안 이 사회의 주인, 기득권자였다. 그 주인의 자리는 1987년 민주화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한 보수 우위의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의 기득권은 점차 도전받고 있다.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려는 뉴라이트 운동은 집권에 성공한 뒤 낡은 보수, 퇴행적 보수로 화귀했다.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 복지 의제에 편승해 집권했으면서도 이를 폐기한 보수는 이 사회를 이끌 가치, 목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 유산을 떨치지 못하는 보수가 진보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는 피해야 한다. 다행히 보수는 아직 적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상대를 진보에서 종북으로 교체함으로써 보수 대 종북의 구도를 조성, 선과 악의 대결로 치환하면 보수는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다. 이 구도에서 보수는 새로운 적을 퇴치하는 자로서 이 사회의 주인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존재 이유, 정체성도 드러낼 수 있다. 한마디로 종북론은 자기 정체성의 모호성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해계모니 구축

종북 악령 추방 운동은 21세기형 반공주의를 창조함으로써 보수 해계모니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해낸다는 허위의 담론들을 생산하고 그 집행을 권력으로 담보하는 한편 이러한 사건을 통해 반공주의를 새로이 강화”³⁰⁾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정통성을 만들어 내려는 것.

혐오를 넘는 폭력의 문제

종북이라는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은 일탈적 사회 행위라는 사회 심리적 문제를 넘는 문제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권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폭력으로 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단순히 어떠한 비정상적 사회집단이 사회적, 역사적 소수자 집단에 가하는 폭력이라는 문제의 수준에 그치지

서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형벌을 받은 죄인을 가리킨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의 형벌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 당하는데 있다. 이들은 사회 질서 바깥에 위치하기에 언제든지 살해당해도 상관없는 존재이며, 이들의 죽음은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호모 사케르는 법체계를 포함해 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든 가치체계로부터 배제된 사회내부의 외부자다. 조르즈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30) 한상희, ‘폭력적 통치술로서의 종북 담론,’ <종북 프레임 토론회 자료집>, 43쪽.

않는다. 오히려 과거 우리 국가의 폭력 수단이었던 냉전적인 반공주의나 개발독재식의 발전주의체제의 담론들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어떤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적대를 구성한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표현이고 발언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뒷받침 속에서 상시적으로 국가폭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위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³¹⁾

박근혜 정부의 현상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보수정부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보수 이념의 순수성과 정체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는 다음 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를 공격한 사건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을 국가안보 위기로 부각시키고, 종북세력의 공격을 막고 차단하는 것이 안보의제임을 강조했다. 둘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고 보수인사들은 이른바 500인 선언 후 “북한 범죄 숨기는 친북 교과서 추방하자” “공산주의 옹호하는 좌경 교과서 추방하자” “대한민국 편협하는 친북 교과서 추방하자”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좌경 교과서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 강연에서 “현재 교과서는 반 대한민국, 친북한적이다. 지금의 좌편향 역사교육은 학생들 뇌에다 독극물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국정화가 목표로 하는 분단 정당화, 이승만 국부론, 독재 미화는 악령 추방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의 어떤 부정적 유산도 악령 보다는 낫다는 상대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3. 국가적 과제로서의 악령 추방

북한 인식은 합리적인데, 북한과 관련한 안보쟁점을 다루는 남한 내의 정치 논쟁은 비이성적으로 흐르고 나아가 북한과 관련이 없는 이른바 종북 문제가 정치사회적 관심을 지배한다. 북한이 우리 안으로 한 발씩 다가올수록,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 안으로 들어올수록, 한국 사회의 병리적 상황과 결합할수록 북한은 하나의 괴물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종북 엑소시즘은 국가의 종교가 된다. 악령 추방은 전 국가적 과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남한 내부 이념 갈등, 북한 추종세력의 존재, 보수의 불안이 뒤섞인 것이 바로 종북 엑소시즘이다.

31) 한상희, 위의 글.

IV. 대안

1. 남북관계 회복

북한이 위협해 질수록, 남북 적대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악마화는 정당화된다.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복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통제하고 예측하며 상호 친밀성을 높여가야 한다.

2. 보수의 합리화

보수는 민주화의 세례를 받은 보수로 거듭나려했던 초기의 뉴 라이트 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는 새로운 보수라면 북한이나 중북이라는 악령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3.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가치가 서로 공존하고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고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는 양당제를 다당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¹⁹⁾

4.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

고경빈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

1.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를 기획하며...
 2. 의식조사개요
 3.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4. 통일 준비에서 남한 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
 5. 소결
- [부록 1] 새터민 2015 의식조사 조사결과 및 통계표
- [부록 2] 새터민 2015 의식조사 설문지

1.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를 기획하며...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이미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요즘 서점에 깔려있는 책 제목들만 봐도 단속사회, 분노사회, 모멸감, 피로사회,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인구절벽 2018 등등 뭔가 답답한데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무기력감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장기불황, 급속한 노령화 현상, 극심한 빈부격차 등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은 문제가 매일 다양한 사례들로 이목을 끈다.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도, 답답한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보노라면, 이러다 힘없이 외세에 규정당해야 했던 구한말 시대를 재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확인하는 일은 씁쓸할 뿐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대박인지, 대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이고, 누구에게 있어 대박인지, 아니 통일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 것인지 등 술한 궁금증이 일어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하다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통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만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지만, 2015년 현재진행중인 ‘헬조선’ 대한민국이 ‘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만나면 사상 최강의 ‘헬조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북한에서 살아봤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난민, 귀순동포 등 갖가지 이름으로 호명당하며,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 사회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통일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자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다.

이에 따라 분단 70년,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통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통일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간단한 설문조사와 집담회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의식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1) 설문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만 13세 이상 총 517명
- 2) 심층 면접 대상: 북한이탈주민 15명

(2) 조사 방법 및 진행 일정

1) 설문조사

- 사전 인터뷰: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5명 및 현장 활동가 사전 인터뷰 실시
- 조사 기간: 2015년 10월 4일(일)-10월 18일(일)
- 1차 설문 조사: 10월 4일(일) 사단법인 좋은벗들 제13차 통일체육축전
 - 영남권 북한이탈주민: 151명
 - 수도권 북한이탈주민: 273명
 - 설문조사 총 424명 참가
- 2차 설문 조사: 좋은벗들의 북한이탈주민 가정방문, 미술심리치료 등 일상사업 참가자 및 북한이탈주민 활동가들의 1대1 면접
 - 설문조사 총 93명 참가

2) 집담회 및 심층면접

- 면접 기간: 10월 8일(목)-10월 12일(월)
- 대상자의 특성

번호	이름	나이	성별	남한 거주기간	직계가족 남한 거주 여부	직계가족 북한 거주 여부
1	최모씨	32	남	11년	없음	부모
2	이A씨	44	남	10년	아내, 자녀 1명	없음
3	전모씨	54	남	10년	아내, 자녀 1명	형제
4	양모씨	48	남	7년	아내, 아들 1명	없음
5	송모군	22	남	3년	없음	없음
6	김A씨	38	여	13년	남편, 자녀 2명	없음
7	한A씨	41	여	12년	남편, 자녀 1명	없음
8	손모씨	32	여	7년	남편, 자녀 2명	부모와 형제
9	김B씨	49	여	6년	자녀 3명	없음
10	이B씨	49	여	5년	없음	남편, 자녀
11	김C씨	31	여	4년	자녀 1명	부모
12	한B씨	49	여	3년	없음	남편과 자녀
13	주모씨	44	여	3년	남편, 자녀 1명	없음
14	황모양	22	여	2년 미만	어머니, 동생	없음
15	양모씨	40	여	1년 미만	없음	없음(중국에 자녀)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도움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평화재단의 자매단체인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해마다 추석명절이 끝나는 즈음 주말에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13회째인 통일체육축전은 추석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전국 북한이탈주민들이 망향과 이산의 정을 달래며, 남한 사회 정착의 설움을 벗고 모처럼 마음껏 뛰고 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당일 통일체육축전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주요한 설문대상자였고, 이후 후속가정방문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기 전에 2-3차례 좋은벗들에 신뢰감이 깊은 북한이탈주민 5명과 현장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등을 통한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다. 사전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일관된 조언은 설문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거부감이 크다고 했다. 너무 많은 설문조사에 노출돼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막상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흔쾌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오히려 한계는 조사 설계에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30개가 넘는 설문조사 문항을 대폭 줄이고, 최대한 쉬운 말로 수정한다고 했지만,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질문지와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생

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문 조사의 한계는 심층면접과 집담회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지만, 설문조사 문항의 취약성은 강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층면접을 했던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설문조사 문항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주기도 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남한 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등 세 분야에서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생활에 대부분 만족하지만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보였다. 또한 통일 의지와 욕구가 대단히 높으면서 통일을 위해 남한의 정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와 남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남한의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한 내용들이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나온 것들인지가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사회 문제나 정책 문제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심층인터뷰는 북한에서의 경력과 남한에서의 경험을 감안하여 남녀 중장년 12명과 청년 3명 등 총 15명의 북한이탈주민의 협조로 7회에 걸쳐 모두 20여 시간 동안 진행했다. 심층인터뷰에서는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관찰한 것이든 남한 사회의 장단점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언급하도록 요청했고,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걱정이나 우려될 만한 사항에 대해 남한의 통일준비 차원에서 언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층인터뷰 녹취록은 각자의 북한에서의 경력과 활동 및 남한 생활에서 보호해야 할 사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 발췌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것만큼이나 남한의 사회문제와 통일준비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다양하기에, 이를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층인터뷰가 정량분석이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도 공감할 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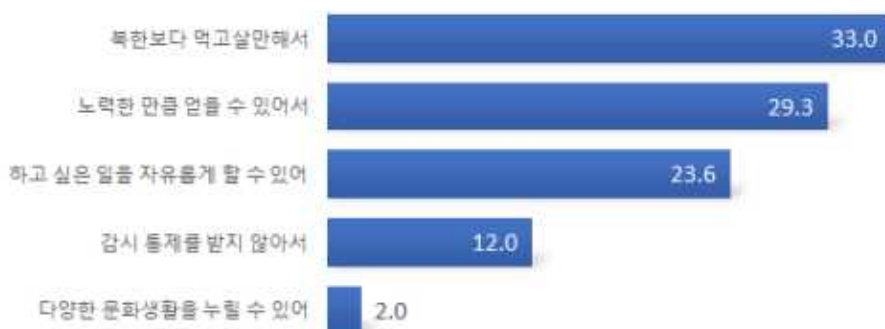
3.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89.9%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2%였으며 만족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를 포함해도 10.1%에 불과하였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북한에 살 때보다 먹고살만해서’라는 응답이 151명, 3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돈, 지위, 명예 등을 얻을 수 있어서’(29.3%),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9명,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3〉 남한 생활 만족 이유(문항1에서 ‘만족’대답)

항목	빈도	%
북한보다 먹고살만해서	151	33.0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서	134	29.3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108	23.6
감시 통제를 받지 않아서	55	12.0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9	2.0
전체	457	100.0

[그림 1-2] 남한 생활 만족 이유



문항1에서 ‘불만스럽다’와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라는 응답이 10명,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33.3%), ‘남한의 법이나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남한 생활 불만 이유(문항1에서‘불만’대답)

항목	빈도	%
차별해서	10	37.0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9	33.3
남한 법,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4	14.8
경쟁이 치열해서	2	7.4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2	7.4
전체	27	100.0

[그림 1-3] 남한 생활 불만 이유



개인 사항에 따른 남한 생활 불만 이유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구간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남한 거주 기간별로는 1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 남북한 거주 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수준 하위와 최하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50대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과 10년 이상 거주자, 남북한에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수준 최하위에서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 최상위와 상위에서는 ‘남한의 법이나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75.0%)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 심각한 물질만능주의 사회

개인의 남한 생활 만족도와 상관없이 현재 남한에 살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3개 씩 고르도록 하였다. 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응답이 241명,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돈이 없으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응답이 232명, 18.4%, 세 번째 많은 응답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15.2%) 문제를 들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7〉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항목	빈도	%
빈부격차 극심	241	19.1
돈 없으면 사람을 무시함	232	18.4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함	192	15.2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169	13.4
좋은 대학 아니면 일자리 얻기 힘들	147	11.6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성공 힘들	102	8.1
사회 약자들이 살기 힘들	96	7.6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움	83	6.6
전체	1262	100.0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그림 1-4]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개인사항에 따른 문제인식에서 여성의 경우는 ‘돈 없으면 사람을 무시한다’(19.1%)는 지적이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응답(22.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좋은 대학 아니면 일자리 얻기 힘들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한국의 평범한 학생들과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19.3%)을 가장 심각한 남한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남한 생활의 장점은 우선 ‘먹고 살만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이다. 반면 ‘상대적인 격차’와 ‘무한경쟁’은 극심하다. 단순히 빈부격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약육강식’이 더 큰 문제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북한에 있을 당시 해외사업을 했던 한 중년의 남성은 향후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말하면 여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너무 아비한 사람이 많아요. 완전 약육강식이야. 약자는 계속 죽어라. 약자는 살아갈 구명도 없어요. 중국이나 필리핀에 가서 한국 사람들 총에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사업가들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그 쪽에 나가 체류하고 있으면서 남측 기업가들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몰래 없어진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한테 몰래 피살된 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중국 사람들 심성을 모르고 돈으로 상대방을 누르려다보니까, 자존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용납 못하거든요. 나는 북쪽하고 관계도 똑같다고 봐요. 그걸 북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 내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너네를 억압하겠다 하면 절대 남북관계 형성이 잘 안 될 겁니다.”(양모씨, 남한 거주 7년차)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질만능주의가 심하다”, “경쟁이 치열한데 너무 아비한 경쟁”이라는 것이 공통된 얘기이다.

오랫동안 미분양된 아파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입주할 수 있게 했더니, 집값이 떨어진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 세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동차 출입통로를 이삿짐이 못 들어오게 자기들의 차로 막아버렸다. 새로 입주하려던 주민들은 아파트 안쪽에 차량을 대지 못해 입구에서부터 이삿짐

을 나르는 불편과 설움을 겪어야 했다. 방송국 취재 카메라가 들어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차를 뺐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부터 입주민의 폭언과 멸시에 시달리다가 분신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소식은 아직도 인구에 자주 화자되는 사건이다. 백화점 모녀가 직원의 무릎을 꿇게 했다는 소식과 부산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90도 인사를 시켰다는 소식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지금도 매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갑질 논란이 된 사건은 사실 불거진 문제일 뿐이다. 사건이 알려지면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회 전체의 자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근절되지도 않는다. ‘돈 많은 사람이 위세를 부라는 것은 당연하고, 돈이 없으면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어느새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을 가리키며 “너 공부 못하면 커서 저 사람처럼 된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그저 ‘물상식한’ 일부 부모들만의 문제일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얻고, 사람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느덧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거에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인생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근데 또 실제 개개인들을 만나서 막 돈 이야기 하고, 돈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아요. 약간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처럼 되더라고요. 사회 분위기는 돈, 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최모씨, 남한 거주 11년차)

올해 남한 생활 12년째에 접어든 한 청년은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에 젖어있으면서도 막상 돈을 멀리하는 듯 한 남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예전에 남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유대감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돈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돈이 최고인 것 같다고요. (웃음) 근데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돈이 최고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니까, 천박한 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돈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등산 같은데 가보면 대부분 옷을 입고도 새 옷을 사고 있고,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또 사러 가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술을 마셔도 1차, 2차, 3차씩 가고. 그런 거 보면 좀 웃기죠.” (최모씨, 남한 거주 11년차)

이런 지적은 ‘행복학의 찰스다윈’이라는, 행복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에드 디너(Ed Diener) 교수의

지적과도 상통한다.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은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 심하다.”³²⁾

2010년 한국심리학회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그는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2005년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130개국 13만7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중간인 5.5점 보다 낮았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 균형’은 130개국 중 116위에 불과했다. 반면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또 다시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행복감 59점(100점 만점)으로 전체 143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10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한국과 같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터키 동쪽의 아르메니아, 중동의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가봉이다. 중국과 일본의 행복감은 각각 75점, 66점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갤럽이 질문한 긍정경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제 편히 쉬었는가? 어제 하루 존중을 받았는가? 어제 많이 미소 짓고 많이 웃었는가? 어제 재미난 일을 하거나 배웠는가? 어제 즐거운 일이 많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은 한국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다. 한국인이 물질중심주의 가치관에 매몰돼있다는 것은, 중산층에 대한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에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을 “매달 515만원을 벌어서 341만원을 쓴다. 35평짜리 주택을 포함해서 6억6000만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매달 네 차례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즐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 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은 45%였고, 나머지 55%는 저소득층이라고 답변했다³³⁾.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나라별로 다

32) 동아일보, “한국인 낮은 행복감, 물질주의 때문”, 2010.08.17, 허진석 기자의 에드 더너 교수 인터뷰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00817/30552252/1>

33) 매일경제,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월소득 515만원... 현실은 416만원”, 2014.06.12, 김태준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882872&year=2014>

르다.³⁴⁾

1.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 '공분' 에 의연히 참여할 것
-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2. 영국의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3.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앞서 에드 디너 교수가 한국인의 물질중심주의 가치관에 대해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갇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가 불행한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결핍감’ 때문이며,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행복은 그만큼 유예된다. 조금만 더 스펙을 쌓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며, 답답해하고 우울해할 뿐이다. 삶의 멘토들을 찾아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애초에 행복의 기준점을 누

34) 서울의소리, “각 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2013.05.01,
http://amn.kr/sub_read.html?uid=8964§ion=sc24

구도 쉽게 닿기 어려운 ‘물질주의’에 두는 바람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점에서 남한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의 병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를 묵인하거나 용인한다는 점, 둘째, 차별화된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즉 차별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낙인을 더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집단일수록 차별과 억압의 시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 차원에서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화된 사회 구조의 힘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준다.

북한 사람들도 경쟁에 지지 않으려는 강한 승부욕, 즉 ‘승벽심’이 있지만, 그것은 남한 사람들의 ‘야비한’ 경쟁심과는 구별된다.

“승벽심하고 경쟁심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데, 좀 질이 다른 북한의 승벽이고, 남한은 그대로 말하면 야비한 그런 경쟁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북한 승벽은 뭐랄까, 여기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먹을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은 해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 차지했다고 자기 혼자 다 먹진 않아요. 승벽을 하면 우리끼리 그래도 도가 있어요. 북한 사람으로선 감성적인 도가 있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게 없어요.” (림모씨, 남한 거주 10년차)

경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약육강식’의 구조가 더 문제라는 얘기다. 아무리 북한 사회가 극한의 빈곤선까지 내려갔지만, 그래서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혹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추정하지만, 최소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북한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준삼아 사람을 멸시하는 분위기에 강한 비판의식을 보인다. 그만큼 평등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남한 사람들보다 발달해있다는 말도 된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한 흔한 인사말이다. ‘자유대한민국’은 ‘독재국가 북한’과 선명한 대립각을 이룬다. 아마 독재사회에서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는 뜻인 것 같다.

설움 속에 쫓겨 다니던 ‘탈북자’의 신분에서 이제 막 ‘대한민국 시민’이 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펍 감동적인 환영인사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들이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말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32세의 최모씨는 개인을 존중하느냐 아니냐를 민주주의의 척도로 보고 있었다. 그는 중국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니 북한과 유사한 면이 많은 획일화된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여기는 인생이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야 하고, 또 환경이 서로 잘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집 사고, 노후를 맞이하는 게 야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인생을 어떻게 정해서 살지? 근데 그대로도 안 되잖아요.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에 쪼들려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잠재력이나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발휘를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나 가치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끔 자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거에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아요. 불쌍해요 사실.”

(최모씨, 남한 거주 11년차)

최모씨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온갖 죽음을 보고 굶어죽을 뻔하고, 뭐 눈 위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해도 그냥 그 자체로 저였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규정받지 않았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남한에 오니 “기초생활수급자라느니 탈북자라고 하고, 자유를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자유를 찾으러 왔다고 하고, 통일의 역군이 되기도 싫은데 통일의 교두보가 되라는 등 항상 규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 기분이 나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가 보기엔 이미 정해진 인생의 행로를 선택의 여지없이 살아야 하는 남한 사람들이 불쌍한데, 남한 사회는 오히려 자기더러 탈북자니 기초생활수급자니 하며 ‘불쌍하게’ 보더라는 것이다.

정자우(2015)에 따르면, “현대의 개인이란 ‘스스로가 스스로인 존재’를 의미”³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회는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고유함을 훼손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적 규정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가령 누군가 나를 출신, 직업, 직책, 경제수준, 사는 지역 등의 ‘사회적 지표’로만 규정한다면 우리는 다소간의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그런 사회적 지표들로 환원되지 않는다...나의 본질은 그러한 사회, 제도, 구조적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층위에 있다”(위 책, pp.27)고 했듯이, 최모씨는 역설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대부분 붕괴된 북한 사회에서 ‘고유한 개인’을 발견한 것이고, 물질만능주의에 포섭된 자본주의 남한 사회에서 개인의 고유함을 훼손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죠. 다 돈으로 형성돼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나쁜 것에 빨리 물들어요. 한 남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탈북여자가 있는데 너무 이쁜데 어찌다 만나면 성형해 있더라요. 왜 탈북자들은 이쁜데도 성형에 중독돼있는지 모르겠다’ 면서왜 탈북자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로 나가는 형편이고, 그 사람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해도 그렇고, 외모부터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낳은 산물이 아닐까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김A씨, 남한 거주 13년차)

성형중독은 자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외모지상주의’라는 자극히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남한 거주 13년째에 이르는 여성이 간파한 것이다. 사회 구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차환되는 것이 비단 외모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돈이 없는 것은 개인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경비원이나 판매원으로, 서비스직으로, 혹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차별을 겪는 것은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이며, 그만큼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개인이 있을지라도, 차별화된 사회 구조를 바꿔내기는 역부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수자로서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하다.

4. 통일 준비에서 남한 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

물론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점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비하면 신분도 안정돼있고, 더 이상 절대적인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감사해한다. 게다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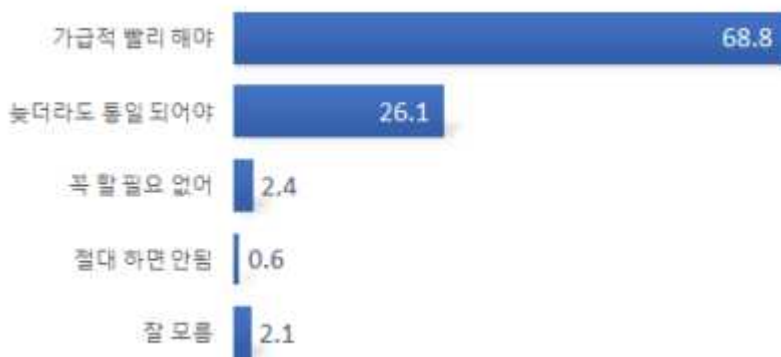
35) 정자우(2014), 『분노사회』, 이경

한 사회의 공고한 ‘유리천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북한보다 보다 열려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보인다. 본인이 노력하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성분과 토대 때문에 좌절당한 경험이 큰 사람일수록 남한 사회에서 ‘자유’를 느낀다.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째인 대학생 송모군은 “(거기에 있을 때는) 나 자신부터 내 조상을 원망하는 거죠. 아 우리 조상은 왜 토대가 저래가지고 나까지, 내 자식들까지 못 살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웃음)”하는 것이 북한 사회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 한국도 그런 면이 조금씩 보이더라고 말한다. 북한보다야 낫지만 남한도 계층 이동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향후 통일 사회에서 남한 사회와 남한 사람들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급적 빨리되거나(68.8%) 늦더라도 통일되어야 한다(26.1%)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94.9%).

[그림 1-8]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설문에서 ‘가급적 빨리됐으면 좋겠다’와 ‘천천히 되더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자 249명, 52.1%가 ‘고향에 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나라의 힘이 커지므로’라고 응답한 이가 133명, 27.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9]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성별로 보았을 경우 여성은 고향에 가고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6.0%), 남성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나라의 힘이 커져서라는 응답이었다(42.9%). 교차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남한 거주 기간 상관없이, 남북한 거주 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에 가거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통일을 꼭 할 필요 없다, 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남북한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 심할 테니까’라는 응답이 9명, 69.2%로 가장 많았다. 남한의 정세와는 달리 통일을 위한 세금문제를 그 이유로 든 비율은 7.7%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509명 중 15명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고 했던 응답자라도, 남북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할 것이라는 데 우려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여론 이면에 놓인 통일이 될 경우의 우려 사항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1) 남한 식 자본주의 사고 지양해야

심층면접 참여자들 역시 통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남한 사회에 경제효과만 부각시키는 통일담론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통일의 이점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드는데, 북한을 식민지적인 관점에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는데, 그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다. 아직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소수 재벌이 모든 권한과 자본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자기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앉아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였다.

남한에서 13년째 생활하고 있는 한 여성은 북한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시선에 불쾌감을 표한다.

“제가 어떤 부자를 만났는데 빨리 통일해야 하는데. 나는 통일이 되면 저기 칠보산이란 데 다가 땅을 사놓을 거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막 부릴 거야. 완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ㄸㄹㅇ 사냐? (전원 박장대소) 진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떠벌리더라고요. 북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 (인식이) 깨지 못했다는 편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들이 그 사람 아니라도 분명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노예 아닌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씨)

청년 최모씨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각을 보인다. 남북교류협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에 묻어나는 ‘차별’과 ‘인간소외’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개성공단 시스템, 저는 별로라고 얘기해요. 맨날 뉴스 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미싱 돌리는 거 나오고, 공장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불편한 게,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돈 버는 거 이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최모씨)

“자본의 앞잡이로 가서 땅따먹기 하려는 게 약간 친일파 같아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값싼 노동력이라고 북한 사람들을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여기처럼 비정규직에 저임금 노동자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넓게 깔려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설문조사에서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한 정부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까?’라는 문항을 보자. 답변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답변 항목이 순위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225명,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2] 통일에 도움 되는 남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개인사항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성별 인식 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연령별 분석에서는 문제인식이 확연히 갈리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0대와 20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과 기초의약품은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30대와 40대는 ‘남한부터 세월호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이상 연령에서는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2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는 남한부터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18.5%), 10년 거주자에서는 남한을 더 민주화시켜서 북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7.4%).

앞서 남한 사회의 문제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불평등 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듯이, 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와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뒀야 하는 부분도 역시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남한부터 차별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남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값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경우, 평등주의 인식이 훨씬 강한 북한 주민들과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물리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누가 북한에 가서 회사 만들었다고 쳐요. 북한 사람들을 종 쳐서 모여라, 일해라 하란다고 잘 될까요?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아가씨가 할아버지 보고도 ‘동무’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 노동자가 뭐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쳐들어가. 지배인실에. 먹살을 잡아요. 야 이 개OO야.

뭐 이런 거 해요. 여기서 그러면 바로 잘리겠죠. 잘리면 그 사람은 밥 못 벌어먹고, 가족이 굶게 되니까 안 하겠죠. 북한 사람은 안 그래요. 잘려봤자 그게 그거니까. 지배인한테 자를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겪다보면, 아마 남한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매 맞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림모씨, 남한 거주 10년차)

역시 남한 생활 올해 10년차에 접어든 한 중년 남성은 “저기 지하자원이 많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북한 주민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한 분들도 좀 낮춰야 해요. 돈 냄새, 배운 냄새, 잘 사는 냄새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가야지 안 그러면 실망이 많아요. 매 맞아요. 저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요. 돈과 기술만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돈 봉투 들고 자랑했다간 필리핀처럼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폭행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돈을 벌려면, 북한 사람들을 일단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지라는 충고의 다른 표현이다. 일부 ‘줄부근성’과 ‘약육강식 사회에서의 사회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라는 조언이기도 하다. 북한의 장점은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 이걸 안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북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는 서로를 돕고 위해주는 게 남아있습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북한식 획일화된 집단주의와 양면성이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세심하게 분석해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의식의 일단에 남한식 자본주의의 대척점으로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2) 가난에 대한 혐오 탈피해야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가난한 북한’이라는 인식이 곧 ‘열등한 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이어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성별, 혈연, 지연, 학벌, 연령 등 갖가지 차별 기제들과 사회적 모순으로 얽혀 있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꼬리표는 또 하나의 차별과 편견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에서 돈 없는 자는 곧 힘이 없는 약자이자 동시에 멸시의 대상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므로, 불쌍해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후진’ 나라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증언자라는 위치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참상은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희화화되기 마련이다. 북한 사람들은 오로지 ‘불쌍한’ 이미지로만 재현된다.

헐벗고 굶주리며 인성을 철저히 파괴당할 만큼 극심한 인권 유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 출신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열등한 북한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열등하다는 인식이 별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일반화된다.

그 사회를 탈출한 사람들은 남다른 용기가 있고, 의식도 빨리 깨인 편이지만 이 점은 간과되기 일쑤다. 아무리 남한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남한에 비해 ‘잘난 게 없는’ 북한 출신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낙인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라면 ‘열등한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 아마도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각은 남한 사회에서 이들이 재빨리 남한화를 시도하고, 북한 정체성을 지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무심결에 “어디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을 때마다, 듣는 사람은 뜨끔하고, 당황스럽고, 귀찮다. “조선족이에요”, “강원도 사람입니다”라고 응수하기도 하지만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남한 살이가 오래되면 될수록 당당하게 이북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하지만, 곧 뒤따라오는 호기심어린-그러나 일정하게 이미 정해져있는 범주의- 질문들을 피할 길이 없다.

남한 생활 초기에는 “왜 혼자 왔냐? 식구들 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넘어온 것이냐”는 무심정한 말에 존재를 부정당하는 충격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에 오기까지 생사를 넘나들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올라온 ‘생존자’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경멸어린 시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디서 왔냐는 말을 듣기 싫어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편견과 아픔을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겪지 않을까요? 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 딸이 커서도 너네 엄마는 북한 사람이다, 탈북자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김B씨, 남한 거주 6년차)

북한이 비록 정치경제적으로 낙후한 독재국가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체제 안에 살았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도 열등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이다. 역지사지로, 남한 사회 역시 온갖 사회 모순을

경험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과 점점 격화되는 사회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개선하기가 어디 쉬운가 말이다. 우리가 열등해서 개선을 못하는 것인지 똑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시작하기가 더 쉽다.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차우하고 있고, 나 자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시민의식을 더 길러야

결국 남한 사회가 더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데로 귀결된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각기 민주주의에 대한 상은 다를 수 있어도, 남한 사회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통일이라는 문제를 안기에는 한국이 아직 어려워. 어리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시민의식이 통일을 안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니다. 어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려워. 지금 여기도 다문화사회가 됐지만 200만 넘는 외국인도 잘 못 안으면서, 70년 떨어져 살아온 북한을 안는다는 게 간단치 않거든요. 경제부담은 오히려 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민의식이 안 되면, 재앙수준의 뭔가 올지도 모릅니다.”

(림모씨, 남한 거주 10년차)

캐나다에서 3년 동안 거주하고 돌아온 한 여성 역시 남한 사회가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과 갈등이 심각할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답했다. 북한 사람들도 시장경제교육이나 사회교육이 필요하지만, 남한 사람들의 ‘분리주의’가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이 지나쳐 ‘남비현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장애인들을 자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시위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두고 엄격하게 구분 짓고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자기 동네에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결사반대하며 집단시위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도,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 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여기서는 감히 불리보지 못했던 북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북한 말도 자연스럽게 쓰고, 유튜브를 통해 밤새도록 북한 영화를 즐겨봤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행복감과 자유를 느꼈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북한 노래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처벌받는

데 말이다. 북한에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을 강압적으로 지워야했던 남한 생활과 대조적인 사회를 경험하고 온 것이다. 즉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온 것이다. 그만큼 남한 사회의 경직된 사고와 억압적인 문화를 의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 행복한 통일이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남한 사람들이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남한 사회는 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모씨는 길거리에 나가면 오가는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했다. 손모씨 역시 캐나다에서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줄 때 “Thank you”, 재채기를 해도, 살짝 부딪혀도, 아주 사소한 일에 일일이 “I’m Sorry”를 연발하는 문화를 겪은 뒤 남한 사람들이 ‘참 거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북한에 비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나은 편이지만, 남한은 지금보다 더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각종 시혜정책을 받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같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남한의 저소득층 가정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받는 것이 편하지가 않다고 얘기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무료로 제공되고, 학원 교육도 저렴하게 받을 기회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그런 기회가 없더라는 것이다. 또 맞벌이 주부로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이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을 빌어 본다면, 향후 통일 사회에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선별적인 복지를 할수록 사회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구조가 공고해지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을 하기 위해 남한 사람과 남한 정부가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소결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 있어서의 만족 요인과 남한 사회의 문제점이자 통일을 위해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 사이에 아래와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남한 생활의 만족 요인은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생활조건과 환경이 해소된 것과 관계가 있다. 즉, ‘먹고살기 힘들었던 것’과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풍요’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은 남한 생활에 만족을 주는 요인이자 남한 사회의 장점으로 인식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남한 사회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남한 생활의 만족 요인이자 남한의 장점으로 인식되는 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절제를 잃고 극단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풍요’와 ‘자유’의 추구가 병적인 ‘물질숭배’와 ‘무한경쟁’으로 흐르면 빈부격차가 심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는(자유롭지 못한)’ 남한 사회의 문제점으로 보이게 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남한 인구의 0.01% 미만의 소수자이므로 남한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현재 남한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점들은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넷째, 남한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물질만능주의’나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모습’들은 향후 통일사회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통일사회는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여야 하는데, 남한 사회는 그런 점에서 한참 못 미친다. 이 점은 남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더 성숙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미흡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았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즉 성찰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곧 해결의 주체가 바로 ‘나/우리’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자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깊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사회 난제들 중에서도 행복한 통일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 나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평화연구원이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이번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는 조사설계부터 한계가 많았다. 일반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심층인터뷰로 보충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열악한 생존 여건에서 벗어나 남한의 땅에서 풍요와 자유를 통해 남한 생활에 압도적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한 사회에도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성숙한 인식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에 응해준 북한이탈주민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조사였다. 의식조사의 한계는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탓일 뿐이다. 의식조사에 참여해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과 좋은벗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¹⁹⁾

[부록 1] 새터민 2015 의식조사 조사결과 및 통계표

〈표 1〉 남한생활 만족도

항목	빈도	%
매우 만족	193	37.5
만족하는 편	270	52.4
불만	26	5.0
매우 불만	1	0.2
잘 모름	25	4.9
전체	515	100.0

〈표 2〉 개인사항에 따른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빈도, (%)

분류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불만	매우 불만	잘 모름	전체
성별	여	147 (39.4)	194 (52.0)	16 (4.3)	0 (0.0)	16 (4.3)	373 (100.0)
	남	38 (30.6)	70 (56.5)	8 (6.5)	1 (0.8)	7 (5.6)	124 (100.0)
연령	10대	1 (16.7)	3 (50.0)	0 (0.0)	0 (0.0)	2 (33.3)	6 (100.0)
	20대	8 (24.2)	18 (54.6)	3 (9.1)	0 (0.0)	4 (12.1)	33 (100.0)
	30대	31 (30.1)	60 (58.2)	8 (7.8)	1 (1.0)	3 (2.9)	103 (100.0)
	40대	71 (45.8)	73 (47.1)	7 (4.5)	0 (0.0)	4 (2.6)	155 (100.0)
	50대	29 (28.2)	60 (58.2)	3 (2.9)	0 (0.0)	11 (10.7)	103 (100.0)
	60대 이상	44 (51.8)	37 (43.5)	3 (3.5)	0 (0.0)	1 (1.2)	85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29 (44.6)	33 (50.8)	1 (1.5)	0 (0.0)	2 (3.1)	65 (100.0)
	1년 ~3년 미만	40 (44.0)	44 (48.3)	3 (3.3)	0 (0.0)	4 (4.4)	91 (100.0)
	3년 ~5년 미만	38 (36.9)	52 (50.5)	6 (5.8)	0 (0.0)	7 (6.8)	103 (100.0)
	5년 ~10년 미만	35 (30.2)	68 (58.6)	8 (6.9)	0 (0.0)	5 (4.3)	116 (100.0)
	10년 이상	28 (34.6)	46 (56.8)	4 (4.9)	1 (1.2)	2 (2.5)	81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51 (37.0)	215 (52.7)	23 (5.6)	1 (0.3)	18 (4.4)	408 (100.0)
	무	23 (36.5)	34 (54.0)	2 (3.2)	0 (0.0)	4 (6.3)	63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80 (31.6)	146 (57.7)	15 (5.9)	0 (0.0)	12 (4.8)	253 (100.0)
	무	92 (43.8)	101 (48.1)	7 (3.3)	1 (0.5)	9 (4.3)	210 (100.0)
경제수준	최상	8 (57.1)	4 (28.6)	0 (0.0)	1 (7.1)	1 (7.2)	14 (100.0)
	상	70 (41.2)	90 (52.9)	4 (2.4)	0 (0.0)	6 (3.5)	170 (100.0)
	하	76 (32.6)	127 (54.5)	19 (8.2)	0 (0.0)	11 (4.7)	233 (100.0)
	최하	17 (37.0)	24 (52.2)	2 (4.3)	0 (0.0)	3 (6.5)	46 (100.0)

〈표 3〉 남한생활 만족 이유(문항1에서 '만족'대답)

항목	빈도	%
북한보다 먹고살만해서	151	33.0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서	134	29.3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108	23.6
감시 통제를 받지 않아서	55	12.0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9	2.0
전체	457	100.0

〈표 4〉 개인사항에 따른 남한생활 만족 이유

단위: 빈도, (%)

분류		북한보다 먹고살만해서	감시 통제를 받지 않아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 누릴 수 있어	원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전체
성별	여	108 (31.9)	30 (8.9)	104 (30.8)	8 (2.4)	88 (26.0)	338 (100.0)
	남	34 (31.8)	24 (22.4)	29 (27.1)	1 (0.9)	19 (17.8)	107 (100.0)
연령	10대	0 (0.0)	1 (25.0)	0 (0.0)	2 (50.0)	1 (25.0)	4 (100.0)
	20대	4 (15.4)	4 (15.4)	10 (38.5)	1 (3.8)	7 (26.9)	26 (100.0)
	30대	17 (19.1)	8 (9.0)	35 (39.3)	3 (3.4)	26 (29.2)	89 (100.0)
	40대	41 (28.7)	13 (9.1)	50 (34.9)	2 (1.4)	37 (25.9)	143 (100.0)
	50대	29 (32.6)	15 (16.8)	28 (31.5)	0 (0.0)	17 (19.1)	89 (100.0)
	60대 이상	43 (55.1)	13 (16.7)	5 (6.4)	1 (1.3)	16 (20.5)	78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13 (21.0)	5 (8.1)	28 (45.1)	0 (0.0)	16 (25.8)	62 (100.0)
	1년 ~3년 미만	20 (24.1)	13 (15.7)	27 (32.5)	1 (1.2)	22 (26.5)	83 (100.0)
	3년 ~5년 미만	30 (33.3)	14 (15.6)	21 (23.3)	2 (2.2)	23 (25.6)	90 (100.0)
	5년 ~10년 미만	40 (38.8)	9 (8.7)	26 (25.3)	4 (3.9)	24 (23.3)	103 (100.0)
	10년 이상	26 (36.1)	11 (15.3)	17 (23.6)	2 (2.8)	16 (22.2)	72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16 (31.9)	44 (12.1)	112 (30.8)	7 (1.9)	85 (23.3)	364 (100.0)
	무	23 (41.1)	7 (12.5)	11 (19.6)	1 (1.8)	14 (25)	56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73 (32.7)	33 (14.8)	58 (26.0)	5 (2.3)	54 (24.2)	223 (100.0)
	무	63 (32.8)	17 (8.9)	65 (33.8)	3 (1.6)	44 (22.9)	192 (100.0)
경제수준	최상	3 (27.3)	1 (9.1)	5 (45.4)	1 (9.1)	1 (9.1)	11 (100.0)
	상	57 (35.6)	23 (14.4)	43 (26.9)	2 (1.2)	35 (21.9)	160 (100.0)
	하	64 (31.7)	22 (10.9)	62 (30.7)	4 (2.0)	50 (24.7)	202 (100.0)
	최하	13 (32.5)	4 (10.0)	10 (25.0)	0 (0.0)	13 (32.5)	40 (100.0)

〈표 5〉 남한생활 불만 이유(문항1에서 '불만'대답)

항목	빈도	%
차별해서	10	37.0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9	33.3
남한 법, 문화에 적응 어려워서	4	14.8
경쟁이 치열해서	2	7.4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2	7.4
전체	27	100.0

〈표 6〉 개인사항에 따른 남한생활 불만 이유

단위: 빈도, (%)

분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쟁이 치열해서	차별해서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남한 법, 문화에 적응 어려워서	전체
성별	여	5 (31.2)	2 (12.5)	6 (37.5)	0 (0.0)	3 (18.8)	16 (100.0)
	남	4 (44.5)	0 (0.0)	3 (33.3)	1 (11.1)	1 (11.1)	9 (100.0)
연령	1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0 (0.0)	1 (33.3)	2 (66.7)	0 (0.0)	0 (0.0)	3 (100.0)
	30대	3 (33.3)	0 (0.0)	2 (22.2)	0 (0.0)	4 (44.5)	9 (100.0)
	40대	1 (14.3)	0 (0.0)	5 (71.4)	1 (14.3)	0 (0.0)	7 (100.0)
	50대	2 (66.7)	0 (0.0)	0 (0.0)	1 (33.3)	0 (0.0)	3 (100.0)
	60대 이상	2 (66.7)	1 (33.3)	0 (0.0)	0 (0.0)	0 (0.0)	3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1년 ~3년 미만	2 (66.7)	0 (0.0)	1 (33.3)	0 (0.0)	0 (0.0)	3 (100.0)
	3년 ~5년 미만	1 (16.7)	0 (0.0)	2 (33.3)	0 (0.0)	3 (50.0)	6 (100.0)
	5년 ~10년 미만	3 (37.5)	0 (0.0)	4 (50.0)	1 (12.5)	0 (0.0)	8 (100.0)
	10년 이상	3 (60.0)	1 (20.0)	0 (0.0)	0 (0.0)	1 (20.0)	5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7 (29.2)	1 (4.1)	10 (41.7)	2 (8.3)	4 (16.7)	24 (100.0)
	무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4 (26.7)	0 (0.0)	8 (53.3)	0 (0.0)	3 (20.0)	15 (100.0)
	무	3 (37.5)	1 (12.5)	2 (25.0)	1 (12.5)	1 (12.5)	8 (100.0)
경제수준	최상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상	1 (25.0)	0 (0.0)	0 (0.0)	0 (0.0)	3 (75.0)	4 (100.0)
	하	7 (36.8)	1 (5.3)	9 (47.4)	2 (10.5)	0 (0.0)	19 (100.0)
	최하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0)

〈표 7〉 남한에 대한 문제인식

항목	빈도	%
빈부격차 극심	241	19.1
돈 없으면 사람 무시	232	18.4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192	15.2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169	13.4
좋은 대학 아니면 일자리 얻기 힘들	147	11.6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성공 힘들	102	8.1
사회 약자들이 살기 힘들	96	7.6
실패하면 재기 어려움	83	6.6
전체	1262	100.0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8〉 개인사항에 따른 남한에 대한 문제인식-1

단위: 빈도, (%)

분류		빈부격차 극심	실패하면 재기 어려움	돈 없으면 사람 무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회 약자들이 살기 힘들
성별	여	169 (18.4)	64 (7.0)	176 (19.1)	139 (15.1)	64 (7.0)
	남	68 (22.0)	18 (5.8)	47 (15.2)	49 (15.8)	29 (9.4)
연령	10대	5 (29.4)	0 (0.0)	3 (17.6)	1 (5.9)	1 (5.9)
	20대	11 (14.3)	5 (6.5)	17 (22.0)	14 (18.2)	6 (7.8)
	30대	48 (17.8)	23 (8.6)	47 (17.5)	52 (19.3)	20 (7.4)
	40대	73 (18.8)	22 (5.7)	67 (17.3)	69 (17.8)	22 (5.7)
	50대	50 (20.5)	10 (4.1)	41 (16.8)	32 (13.1)	24 (9.8)
	60대 이상	44 (20.7)	19 (9.0)	41 (19.3)	22 (10.4)	19 (9.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29 (17.9)	13 (8.0)	25 (15.4)	24 (14.8)	13 (8.0)
	1년 ~3년 미만	42 (18.7)	20 (8.9)	43 (19.1)	31 (13.8)	17 (7.5)
	3년 ~5년 미만	50 (18.4)	17 (6.3)	45 (16.5)	44 (16.2)	24 (8.8)
	5년 ~10년 미만	59 (19.8)	15 (5.0)	57 (19.1)	52 (17.4)	21 (7.0)
	10년 이상	38 (21.0)	8 (4.4)	38 (21.0)	24 (13.3)	14 (7.7)
북한 거주 가족	유	196 (19.1)	67 (6.5)	188 (18.4)	156 (15.2)	73 (7.1)
	무	27 (18.5)	8 (5.5)	25 (17.1)	23 (15.8)	17 (11.6)
남한 거주 가족	유	131 (20.5)	41 (6.4)	114 (17.8)	100 (15.6)	52 (8.1)
	무	89 (17.2)	35 (6.8)	96 (18.6)	78 (15.1)	35 (6.8)
경제수준	최상	6 (16.7)	2 (5.5)	5 (13.9)	5 (13.9)	3 (8.3)
	상	86 (20.8)	22 (5.3)	73 (17.7)	70 (16.9)	34 (8.2)
	하	109 (18.3)	43 (7.2)	112 (18.9)	88 (14.8)	39 (6.6)
	최하	21 (18.6)	7 (6.2)	18 (15.9)	16 (14.2)	12 (10.6)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9〉 개인사항에 따른 남한에 대한 문제인식-2

단위: 빈도, (%)

분류		좋은 대학 아니면 일자리 얻기 힘들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성공 힘들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전체
성별	여	115 (12.5)	76 (8.3)	116 (12.6)	919 (100.0)
	남	28 (9.1)	20 (6.5)	50 (16.2)	309 (100.0)
연령	10대	4 (23.5)	2 (11.8)	1 (5.9)	17 (100.0)
	20대	15 (19.5)	4 (5.2)	5 (6.5)	77 (100.0)
	30대	34 (12.6)	12 (4.5)	33 (12.3)	269 (100.0)
	40대	46 (11.8)	30 (7.7)	59 (15.2)	388 (100.0)
	50대	30 (12.3)	24 (9.9)	33 (13.5)	244 (100.0)
	60대 이상	12 (5.7)	21 (9.9)	34 (16.0)	212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32 (19.8)	12 (7.4)	14 (8.7)	162 (100.0)
	1년 ~3년 미만	34 (15.1)	16 (7.1)	22 (9.8)	225 (100.0)
	3년 ~5년 미만	23 (8.5)	21 (7.7)	48 (17.6)	272 (100.0)
	5년 ~10년 미만	27 (9.0)	24 (8.0)	44 (14.7)	299 (100.0)
	10년 이상	17 (9.4)	13 (7.2)	29 (16.0)	181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24 (12.1)	87 (8.5)	134 (13.1)	1025 (100.0)
	무	12 (8.2)	9 (6.2)	25 (17.1)	146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63 (9.9)	59 (9.2)	80 (12.5)	640 (100.0)
	무	71 (13.8)	35 (6.8)	77 (14.9)	516 (100.0)
경제수준	최상	5 (13.9)	5 (13.9)	5 (13.9)	36 (100.0)
	상	35 (8.5)	25 (6.1)	68 (16.5)	413 (100.0)
	하	77 (13.0)	53 (8.9)	73 (12.3)	594 (100.0)
	최하	17 (15.0)	7 (6.2)	15 (13.3)	113 (100.0)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10〉 최근 북한 생활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
매우 좋아짐	18	3.6
좋아짐	101	20.4
그저 그럼	220	44.4
나빠짐	76	15.3
매우 나빠짐	81	16.3
전체	496	100.0

〈표 11〉 개인사항에 따른 최근 북한 생활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분류		매우 좋아짐	좋아짐	그저 그럼	나빠짐	매우 나빠짐	전체
성별	여	12 (3.4)	73 (20.5)	156(43.8)	57 (16.0)	58 (16.3)	356 (100.0)
	남	4 (3.3)	25 (20.3)	58 (47.2)	17 (13.8)	19 (15.4)	123 (100.0)
연령	10대	0 (0.0)	0 (0.0)	3 (50.0)	1 (16.7)	2 (33.3)	6 (100.0)
	20대	1 (3.1)	5 (15.6)	17 (53.2)	5 (15.6)	4 (12.5)	32 (100.0)
	30대	4 (4.1)	14 (14.3)	51 (52.0)	16 (16.3)	13 (13.3)	98 (100.0)
	40대	4 (2.7)	32 (21.5)	76 (51.0)	20 (13.4)	17 (11.4)	149 (100.0)
	50대	1 (1.0)	28 (27.7)	36 (35.7)	17 (16.8)	19 (18.8)	101 (100.0)
	60대 이상	6 (7.4)	15 (18.5)	22 (27.2)	15 (18.5)	23 (28.4)	81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1 (1.6)	11 (17.4)	34 (54.0)	10 (15.9)	7 (11.1)	63 (100.0)
	1년 ~3년 미만	2 (2.3)	14 (16.1)	43 (49.4)	15 (17.2)	13 (15.0)	87 (100.0)
	3년 ~5년 미만	3 (3.0)	18 (18.0)	42 (42.0)	17 (17.0)	20 (20.0)	100 (100.0)
	5년 ~10년 미만	3 (2.7)	22 (19.8)	56 (50.5)	11 (9.9)	19 (17.1)	111 (100.0)
	10년 이상	3 (3.9)	20 (26.0)	27 (35.0)	14 (18.2)	13 (16.9)	77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2 (3.1)	82 (20.9)	171(43.5)	65 (16.5)	63 (16.0)	393 (100.0)
	무	2 (3.3)	9 (15.0)	31 (51.7)	5 (8.3)	13 (21.7)	60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8 (3.3)	48 (19.9)	107(44.4)	40 (16.6)	38 (15.8)	241 (100.0)
	무	7 (3.4)	43 (21.1)	91 (44.6)	28 (13.7)	35 (17.2)	204 (100.0)
경제수준	최상	2 (14.3)	2 (14.3)	4 (28.5)	2 (14.3)	4 (28.6)	14 (100.0)
	상	8 (4.9)	31 (18.9)	71 (43.3)	26 (15.8)	28 (17.1)	164 (100.0)
	하	3 (1.3)	51 (22.6)	106(46.9)	32 (14.2)	34 (15.0)	226 (100.0)
	최하	0 (0.0)	6 (14.3)	21 (50.0)	8 (19.0)	7 (16.7)	42 (100.0)

〈표 12〉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
매우 잘 하고 있음	5	1.0
다소 잘 하고 있음	29	5.8
잘 못하고 있음	147	29.6
아주 잘 못하고 있음	200	40.3
잘 모름	115	23.2
전체	496	100.0

〈표 13〉 개인사항에 따른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분류		매우 잘 하고 있음	다소 잘 하고 있음	잘 모름	잘 못하고 있음	아주 잘 못하고 있음	전체
성별	여	3 (0.9)	22 (6.1)	84 (23.4)	101 (28.1)	149 (41.5)	359 (100.0)
	남	2 (1.6)	6 (5.0)	26 (21.5)	40 (33.1)	47 (38.8)	121 (100.0)
연령	10대	0 (0.0)	0 (0.0)	2 (33.3)	3 (50.0)	1 (16.7)	6 (100.0)
	20대	0 (0.0)	3 (9.1)	17 (51.5)	5 (15.2)	8 (24.2)	33 (100.0)
	30대	1 (1.0)	8 (8.3)	26 (27.1)	16 (16.7)	45 (46.9)	96 (100.0)
	40대	1 (0.7)	9 (6.0)	24 (15.9)	52 (34.4)	65 (43.0)	151 (100.0)
	50대	1 (1.0)	3 (3.0)	22 (21.8)	35 (34.6)	40 (39.6)	101 (100.0)
	60대 이상	1 (1.2)	3 (3.7)	14 (17.3)	28 (34.6)	35 (43.2)	81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0 (0.0)	5 (8.2)	20 (32.8)	15 (24.6)	21 (34.4)	61 (100.0)
	1년 ~3년 미만	0 (0.0)	6 (6.9)	15 (17.2)	26 (29.9)	40 (46.0)	87 (100.0)
	3년 ~5년 미만	1 (1.0)	5 (5.0)	15 (15.0)	33 (33.0)	46 (46.0)	100 (100.0)
	5년 ~10년 미만	0 (0.0)	4 (3.5)	31 (27.0)	32 (27.8)	48 (41.7)	115 (100.0)
	10년 이상	2 (2.6)	5 (6.6)	14 (18.4)	25 (32.9)	30 (39.5)	76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3 (0.8)	24 (6.0)	83 (20.9)	120 (30.2)	167 (42.1)	397 (100.0)
	무	0 (0.0)	2 (3.4)	15 (25.4)	18 (30.5)	24 (40.7)	59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2 (0.8)	12 (5.0)	49 (20.3)	79 (32.8)	99 (41.1)	241 (100.0)
	무	1 (0.5)	14 (6.8)	47 (22.8)	56 (27.2)	88 (42.7)	206 (100.0)
경제수준	최상	0 (0.0)	2 (15.4)	1 (7.7)	4 (30.8)	6 (46.1)	13 (100.0)
	상	0 (0.0)	9 (5.5)	37 (22.7)	52 (31.9)	65 (39.9)	163 (100.0)
	하	2 (0.9)	10 (4.4)	49 (21.5)	69 (30.2)	98 (43.0)	228 (100.0)
	최하	0 (0.0)	6 (14.6)	10 (24.4)	10 (24.4)	15 (36.6)	41 (100.0)

〈표 14〉 차기 북한 정부에 대한 기대 인식

항목	빈도	%
남한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지향	309	61.7
국민 탄압 않을 민주정부	91	18.2
통일보다 경제발전 먼저 추구	76	15.2
통일보다 진정한 사회주의 실현	25	5.0
전체	501	100.0

〈표 15〉 개인사항에 따른 차기 북한 정부에 대한 기대 인식 단위: 빈도, (%)

분류		남한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지향	통일보다 경제발전 먼저 추구	통일보다 진정한 사회주의 실현	국민 탄압 없을 민주정부	전체
성별	여	223 (61.4)	57 (15.7)	15 (4.1)	68 (18.8)	363 (100.0)
	남	77 (63.1)	14 (11.5)	8 (6.6)	23 (18.8)	122 (100.0)
연령	10대	4 (80.0)	0 (0.0)	0 (0.0)	1 (20.0)	5 (100.0)
	20대	19 (57.6)	5 (15.2)	1 (3.0)	8 (24.2)	33 (100.0)
	30대	59 (60.2)	18 (18.4)	5 (5.1)	16 (16.3)	98 (100.0)
	40대	96 (63.2)	23 (15.1)	6 (3.9)	27 (17.8)	152 (100.0)
	50대	61 (59.8)	15 (14.7)	5 (4.9)	21 (20.6)	102 (100.0)
	60대 이상	50 (60.2)	10 (12.1)	8 (9.6)	15 (18.1)	83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44 (69.8)	2 (3.2)	2 (3.2)	15 (23.8)	63 (100.0)
	1년 ~3년 미만	58 (64.4)	14 (15.6)	6 (6.7)	12 (13.3)	90 (100.0)
	3년 ~5년 미만	63 (61.8)	14 (13.7)	2 (2.0)	23 (22.5)	102 (100.0)
	5년 ~10년 미만	68 (60.2)	24 (21.2)	3 (2.7)	18 (15.9)	113 (100.0)
	10년 이상	41 (51.9)	11 (13.9)	8 (10.1)	19 (24.1)	79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248 (62.2)	59 (14.8)	16 (4.0)	76 (19.0)	399 (100.0)
	무	39 (62.9)	7 (11.3)	5 (8.1)	11 (17.7)	62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147 (60.0)	38 (15.5)	10 (4.1)	50 (20.4)	245 (100.0)
	무	133 (64.3)	28 (13.5)	10 (4.8)	36 (17.4)	207 (100.0)
경제수준	최상	5 (38.4)	3 (23.1)	2 (15.4)	3 (23.1)	13 (100.0)
	상	99 (58.9)	25 (14.9)	9 (5.4)	35 (20.8)	168 (100.0)
	하	149 (64.5)	34 (14.7)	6 (2.6)	42 (18.2)	231 (100.0)
	최하	27 (64.3)	4 (9.5)	4 (9.5)	7 (16.7)	42 (100.0)

〈표 16〉 통일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
가급적 빨리 해야	350	68.8
늦더라도 통일 되어야	133	26.1
꼭 할 필요 없어	12	2.4
절대 하면 안 됨	3	0.6
잘 모름	11	2.2
전체	509	100

〈표 17〉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

분류		가급적 빨리 해야	늦더라도 통일 되어야	꼭 할 필요 없어	절대 하면 안됨	잘 모름	전체
성별	여	255(69.3)	96 (26.1)	8 (2.2)	1 (0.2)	8 (2.2)	368 (100.0)
	남	86 (68.8)	34 (27.2)	2 (1.6)	1 (0.8)	2 (1.6)	125 (100.0)
연령	10대	3 (50.0)	1 (16.7)	0 (0.0)	0 (0.0)	2 (33.3)	6 (100.0)
	20대	18 (53.0)	15 (44.1)	1 (2.9)	0 (0.0)	0 (0.0)	34 (100.0)
	30대	59 (58.4)	37 (36.6)	2 (2.0)	1 (1.0)	2 (2.0)	101 (100.0)
	40대	106(69.3)	38 (24.8)	6 (3.9)	0 (0.0)	3 (2.0)	153 (100.0)
	50대	79 (76.7)	21 (20.4)	2 (1.9)	0 (0.0)	1 (1.0)	103 (100.0)
	60대 이상	63 (75.0)	16 (19.0)	1 (1.2)	2 (2.4)	2 (2.4)	84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40 (61.5)	23 (35.4)	2 (3.1)	0 (0.0)	0 (0.0)	65 (100.0)
	1년 ~3년 미만	69 (77.5)	15 (16.9)	1 (1.1)	2 (2.2)	2 (2.3)	89 (100.0)
	3년 ~5년 미만	74 (71.2)	26 (25.0)	2 (1.9)	0 (0.0)	2 (1.9)	104 (100.0)
	5년 ~10년 미만	79 (69.3)	28 (24.6)	5 (4.4)	0 (0.0)	2 (1.7)	114 (100.0)
	10년 이상	46 (57.5)	28 (35.0)	1 (1.2)	1 (1.2)	4 (5.1)	80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279(69.1)	101(25.0)	12 (3.0)	3 (0.7)	9 (2.2)	404 (100.0)
	무	44 (69.8)	19 (30.2)	0 (0.0)	0 (0.0)	0 (0.0)	63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171(68.7)	68 (27.3)	6 (2.4)	0 (0.0)	4 (1.6)	249 (100.0)
	무	148(70.8)	50 (23.9)	5 (2.4)	3 (1.4)	3 (1.5)	209 (100.0)
경제수준	최상	10 (71.4)	3 (21.4)	1 (7.2)	0 (0.0)	0 (0.0)	14 (100.0)
	상	118(70.2)	43 (25.6)	1 (0.6)	1 (0.6)	5 (3.0)	168 (100.0)
	하	164(71.0)	55 (23.8)	7 (3.0)	2 (0.9)	3 (1.3)	231 (100.0)
	최하	28 (60.9)	14 (30.4)	3 (6.5)	0 (0.0)	1 (2.2)	46 (100.0)

〈표 18〉 통일을 원하는 이유(문항1에서 ‘통일 원해’ 응답)

항목	빈도	%
고향 가고 가족 만날 수 있어	249	52.1
나라 힘이 커지므로	133	27.8
평화롭게 살 수 있어	51	10.7
북한 사람이 먹고사는 길이 열려	45	9.4
전체	478	100.0

〈표 19〉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을 원하는 이유

단위: 빈도, (%)

분류		고향 가고 가족 만날 수 있어	나라 힘이 커지므로	북한 사람 먹고 사는 길이 열려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전체
성별	여	195 (56.0)	80 (23.0)	35 (10.1)	38 (10.9)	348 (100.0)
	남	45 (37.8)	51 (42.9)	10 (8.4)	13 (10.9)	119 (100.0)
연령	10대	2 (50.0)	1 (25.0)	0 (0.0)	1 (25.0)	4 (100.0)
	20대	17 (51.5)	8 (24.3)	4 (12.1)	4 (12.1)	33 (100.0)
	30대	50 (52.7)	23 (24.2)	12 (12.6)	10 (10.5)	95 (100.0)
	40대	67 (47.2)	52 (36.6)	13 (9.2)	10 (7.0)	142 (100.0)
	50대	61 (61.0)	26 (26.0)	4 (4.0)	9 (9.0)	100 (100.0)
	60대 이상	37 (47.5)	16 (20.5)	10 (12.8)	15 (19.2)	78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33 (52.4)	22 (34.9)	4 (6.4)	4 (6.3)	63 (100.0)
	1년 ~3년 미만	45 (54.9)	19 (23.2)	7 (8.5)	11 (13.4)	82 (100.0)
	3년 ~5년 미만	52 (52.0)	27 (27.0)	10 (10.0)	11 (11.0)	100 (100.0)
	5년 ~10년 미만	54 (51.0)	32 (30.2)	10 (9.4)	10 (9.4)	106 (100.0)
	10년 이상	36 (48.6)	21 (28.4)	9 (12.2)	8 (10.8)	74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209 (55.4)	99 (26.3)	35 (9.3)	34 (9.0)	377 (100.0)
	무	22 (35.5)	18 (29.0)	8 (12.9)	14 (22.6)	62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128 (54.0)	58 (24.5)	24 (10.1)	27 (11.4)	237 (100.0)
	무	94 (48.0)	63 (32.1)	18 (9.2)	21 (10.7)	196 (100.0)
경제수준	최상	7 (53.8)	2 (15.4)	2 (15.4)	2 (15.4)	13 (100.0)
	상	86 (54.1)	38 (23.9)	19 (11.9)	16 (10.1)	159 (100.0)
	하	114 (52.5)	59 (27.2)	21 (9.7)	23 (10.6)	217 (100.0)
	최하	19 (45.2)	20 (47.6)	1 (2.4)	2 (4.8)	42 (100.0)

〈표 20〉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문항1에서 ‘통일 원치 않아’ 응답)

항목	빈도	%
남북한 갈등이 너무 심할 테니까	9	69.2
옛 원한으로 서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3	23.1
북한 발전에 엄청난 세금 내야 하니까	1	7.7
남한의 나쁜 점이 북한에 퍼지니까	0	0.0
전체	13	100.0

〈표 21〉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빈도, (%)

분류		북한 발전에 엄청난 세금 내야 하니까	남북한 갈등이 너무 심할 테니까	옛 원한으로 서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남한의 나쁜 점이 북한에 퍼지니까	전체
성별	여	0 (0.0)	5 (62.5)	3 (37.5)	0 (0.0)	8 (100.0)
	남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연령	1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20대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30대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40대	0 (0.0)	5 (100.0)	0 (0.0)	0 (0.0)	5 (100.0)
	50대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60대 이상	1 (33.3)	1 (33.3)	1 (33.3)	0 (0.0)	3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1년 ~3년 미만	0 (0.0)	3 (100.0)	0 (0.0)	0 (0.0)	3 (100.0)
	3년 ~5년 미만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5년 ~10년 미만	0 (0.0)	2 (50.0)	2 (50.0)	0 (0.0)	4 (100.0)
	10년 이상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 (7.7)	9 (69.2)	3 (23.1)	0 (0.0)	13 (100.0)
	무	0 (0.0)	0 (0.0)	0 (0.0)	0 (0.0)	0 (0.0)
남한 거주 가족	유	0 (0.0)	3 (60.0)	2 (40.0)	0 (0.0)	5 (100.0)
	무	1 (14.3)	5 (71.4)	1 (14.3)	0 (0.0)	7 (100.0)
경제수준	최상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상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하	1 (14.3)	5 (71.4)	1 (14.3)	0 (0.0)	7 (100.0)
	최하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표 22〉 통일 후 남한 거주 희망 여부

항목	빈도	%
매우 그렇다	133	26.3
그렇다	201	39.7
그렇지 않다	68	13.4
전혀 그렇지 않다	14	2.8
잘 모름	90	17.8
전체	506	100.0

〈표 23〉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 후 남한 거주 희망 여부

단위: 빈도, (%)

분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전체
성별	여	108(29.3)	156(42.3)	39 (10.6)	5 (1.4)	61 (16.4)	369 (100.0)
	남	22 (18.0)	40 (32.8)	28 (23.0)	9 (7.4)	23 (18.8)	122 (100.0)
연령	10대	3 (50.0)	0 (0.0)	1 (16.7)	0 (0.0)	2 (33.3)	6 (100.0)
	20대	5 (15.2)	15 (45.5)	4 (12.1)	0 (0.0)	9 (27.2)	33 (100.0)
	30대	35 (34.3)	29 (28.4)	18 (17.6)	2 (2.0)	18 (17.7)	102 (100.0)
	40대	40 (26.0)	64 (41.6)	20 (13.0)	7 (4.5)	23 (14.9)	154 (100.0)
	50대	18 (17.6)	49 (48.0)	11 (10.8)	2 (2.0)	22 (21.6)	102 (100.0)
	60대 이상	28 (34.1)	29 (35.4)	11 (13.4)	2 (2.4)	12 (14.7)	82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26 (40.6)	26 (40.6)	5 (7.8)	1 (1.6)	6 (9.4)	64 (100.0)
	1년 ~3년 미만	22 (24.4)	41 (45.6)	12 (13.3)	2 (2.2)	13 (14.5)	90 (100.0)
	3년 ~5년 미만	25 (24.5)	36 (35.3)	13 (12.7)	5 (4.9)	23 (22.6)	102 (100.0)
	5년 ~10년 미만	31 (26.7)	43 (37.1)	16 (13.8)	3 (2.6)	23 (19.8)	116 (100.0)
	10년 이상	17 (21.5)	30 (38.0)	16 (20.3)	3 (3.8)	13 (16.4)	79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05(25.9)	156(38.5)	60 (14.8)	13 (3.2)	71 (17.6)	405 (100.0)
	무	21 (34.4)	23 (37.7)	6 (9.8)	1 (1.6)	10 (16.5)	61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57 (22.7)	100(39.8)	41 (16.3)	9 (3.6)	44 (17.6)	251 (100.0)
	무	67 (32.5)	76 (36.9)	24 (11.7)	5 (2.4)	34 (16.5)	206 (100.0)
경제수준	최상	7 (50.0)	3 (21.4)	2 (14.3)	1 (7.1)	1 (7.2)	14 (100.0)
	상	56 (33.5)	54 (32.3)	25 (15.0)	6 (3.6)	26 (15.6)	167 (100.0)
	하	47 (20.4)	106(46.1)	30 (13.0)	6 (2.6)	41 (17.9)	230 (100.0)
	최하	14 (30.4)	14 (30.4)	6 (13.0)	1 (2.2)	11 (24.0)	46 (100.0)

〈표 24〉 통일에 도움 되는 남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	%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225	18.0
남한부터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207	16.6
남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206	16.5
남한을 더 민주화시켜 북한에 모범을 보여야	196	15.7
북한 주민을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해야	194	15.5
남한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122	9.8
북한 전국 시장마다 남한 상품들로 채워야	98	7.9
전체	1248	100.0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25〉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에 도움 되는

남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1

단위: 빈도, (%)

분류		북한 주민을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해야	북한 전국 시장마다 남한 상품들로 채워야	남한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성별	여	142 (15.5)	63 (6.9)	90 (9.8)	166 (18.1)
	남	46 (15.4)	34 (11.4)	29 (9.7)	55 (18.4)
연령	10대	4 (28.6)	0 (0.0)	1 (7.1)	3 (21.4)
	20대	17 (22.0)	5 (6.5)	4 (5.2)	13 (16.9)
	30대	35 (13.0)	26 (9.7)	33 (12.3)	45 (16.7)
	40대	64 (17.2)	20 (5.4)	34 (9.2)	56 (15.1)
	50대	33 (13.1)	16 (6.4)	24 (9.5)	54 (21.4)
	60대 이상	31 (15.1)	26 (12.7)	23 (11.2)	42 (20.5)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22 (13.3)	10 (6.1)	16 (9.7)	34 (20.6)
	1년 ~3년 미만	31 (13.7)	18 (8.0)	22 (9.7)	44 (19.5)
	3년 ~5년 미만	32 (12.3)	20 (7.7)	27 (10.4)	57 (21.9)
	5년 ~10년 미만	54 (17.9)	32 (10.6)	24 (8.0)	48 (15.9)
	10년 이상	29 (16.3)	11 (6.2)	23 (12.9)	28 (15.7)
북한 거주 가족	유	156 (15.3)	76 (7.4)	97 (9.5)	186 (18.2)
	무	20 (13.7)	15 (10.3)	15 (10.3)	28 (19.2)
남한 거주 가족	유	101 (15.9)	46 (7.3)	68 (10.7)	116 (18.3)
	무	69 (13.6)	42 (8.3)	43 (8.5)	94 (18.6)
경제수준	최상	4 (13.8)	2 (6.9)	5 (17.2)	6 (20.7)
	상	65 (15.4)	42 (9.9)	41 (9.7)	78 (18.5)
	하	92 (15.5)	39 (6.5)	49 (8.2)	108 (18.1)
	최하	15 (13.6)	9 (8.2)	16 (14.5)	20 (18.2)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26〉 개인사항에 따른 통일에 도움 되는

남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 1

단위: 빈도, (%)

분류		남한을 더 민주화시켜 북한에 모범을 보여야	남한부터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남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전체
성별	여	134 (14.6)	152 (16.6)	170 (18.5)	170 (100.0)
	남	54 (18.0)	50 (16.7)	31 (10.4)	31 (100.0)
연령	10대	1 (7.1)	3 (21.4)	2 (14.4)	2 (100.0)
	20대	8 (10.4)	15 (19.5)	15 (19.5)	15 (100.0)
	30대	36 (13.4)	44 (16.3)	50 (18.6)	50 (100.0)
	40대	62 (16.7)	66 (17.8)	69 (18.6)	69 (100.0)
	50대	46 (18.3)	48 (19.0)	31 (12.3)	31 (100.0)
	60대 이상	32 (15.6)	23 (11.2)	28 (13.7)	28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27 (16.4)	30 (18.2)	26 (15.7)	26 (100.0)
	1년 ~3년 미만	36 (15.9)	37 (16.4)	38 (16.8)	38 (100.0)
	3년 ~5년 미만	41 (15.8)	42 (16.1)	41 (15.8)	41 (100.0)
	5년 ~10년 미만	40 (13.2)	56 (18.5)	48 (15.9)	48 (100.0)
	10년 이상	31 (17.4)	26 (14.6)	30 (16.9)	30 (100.0)
북한 거주 가족	유	164 (16.1)	172 (16.8)	171 (16.7)	171 (100.0)
	무	22 (15.0)	26 (17.8)	20 (13.7)	20 (100.0)
남한 거주 가족	유	89 (14.0)	114 (18.0)	100 (15.8)	100 (100.0)
	무	91 (18.0)	81 (16.0)	86 (17.0)	86 (100.0)
경제수준	최상	2 (6.9)	7 (24.1)	3 (10.4)	3 (100.0)
	상	64 (15.2)	64 (15.2)	68 (16.1)	68 (100.0)
	하	104 (17.5)	102 (17.1)	102 (17.1)	102 (100.0)
	최하	17 (15.5)	17 (15.5)	16 (14.5)	16 (100.0)

[참조: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표 27〉 개인적 사항

분류		빈도 517	% 100.0
성별	여	374	74.9
	남	125	25.1
연령	10대	6	1.2
	20대	34	7.0
	30대	103	21.1
	40대	155	31.8
	50대	103	21.1
	60대 이상	86	17.7
남한 거주 기간	1년 미만	65	14.2
	1년 ~3년 미만	91	19.9
	3년 ~5년 미만	104	22.8
	5년 ~10년 미만	116	25.4
	10년 이상	81	17.7
북한 거주 가족	유	408	86.4
	무	64	13.6
남한 거주 가족	유	254	54.7
	무	210	45.3
경제수준	최상	14	3
	상	170	36.6
	하	234	50.4
	최하	46	9.9

[참조] 전체 빈도는 설문 참여자 기준이며 각 항목별 빈도는 개인사항 응답 기준임.

[부록 2]

내가 만드는 통일 2015 의식조사

“남한에서 살아보니, 이대로 통일해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설문관련 문의: (사)좋은벗들 02-587-8996

※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 살아보니, 남한 사회가 어떤가요?

1. 남한에 살아보니,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남한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불만스럽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⑤ 잘 모르겠다.

1-1 (문항 1에서 ①, ② 대답) 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북한에 살 때보다 먹고살만하니까
② 정부나 주변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③ 내가 노력한 만큼 돈, 지위, 명예 등을 얻을 수 있어서
④ 영화나 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1-2. (문항 1에서 ③, ④ 대답)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②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 ③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해서 ④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 ⑤ 남한의 법이나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2. 현재 남한에 살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3개 고르세요.

- 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 ②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기 어렵다.
- ③ 돈이 없으면 사람을 무시한다.
- ④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심하다.
- ⑤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 부모 없는 어린이 등 사회 약자들이 살기 힘들다.
- ⑥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 ⑦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 ⑧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사익을 더 생각한다.

❖ 최근 북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1.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최근 생활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졌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2.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② 다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 ③ 잘 모르겠다. ④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⑤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 다음에 들어설 북한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어떻게든 남한과 협력해서 평화통일을 하려는 정부
- ② 통일보다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을 먼저 시키는 정부
- ③ 통일보다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정부
- ④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탄압하지 않을 민주정부

❖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1.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가급적 빨리됐으면 좋겠다.
- ② 천천히 되더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 ③ 통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 ④ 통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 ⑤ 잘 모르겠다.

1-1 (문항 1에서 ①, ② 대답) 통일을 원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고향에 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 ②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나라의 힘이 커지므로
- ③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 ④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1-2 (문항 1에서 ③, ④ 대답)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북한을 발전시키려면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 ② 남북한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 심할 테니까.
- ③ 옛 원한을 갖고 서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 ④ 남한의 나쁜 점들이 북한에도 퍼지니까.

2. 통일이 되도 남한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3. 남한 정부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3가지만 고르세요.

- ①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과 기초의약품은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 ② 평양 백화점이나 북한 전국 시장마다 남한 상품들로 채워야 한다.
- ③ 빈부격차가 커지더라도 남한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 ④ 남한부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 ⑤ 남한 사회를 더 민주화시켜 북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⑥ 남한부터 능력, 외모, 인종, 성별, 지역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⑦ 남한부터 세월호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개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남한 거주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4. 북한 가족	북한에는 가족이 남아있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5. 남한 가족	남한에 가족이 있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6. 경제수준	① 매우 잘 사는 편 ② 잘 사는 편 ③ 못 사는 편 ④ 매우 못사는 편

5.

통일 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김호기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content

1. 문제제기
2.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
3. 남남갈등의 현실과 해소 방안
4. 통일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5. 잠정적 결론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70년에 가까운 남과 북의 이질화 과정을 돌아볼 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는 가치다. 학계의 경우 박세일의 <선진 통일 전략>(2013)과 백낙청의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2006)을 보더라도, 통일이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에서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과 북한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그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는데, 북한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의 기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이루어야 하고 그 방식이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강화, 사회문화의 이질성 해소 등 차근차근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충실한 것만이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통일이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일이 중대한 민족사적 과제라면,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크게 보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통일 외교가 중요하다. 이 가운데 우리 사회의 변화는 다시 통일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준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글은 통일 코리안을 위한 정치적 준비와 사회문화적 준비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으로서의 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어떤 것일까. 보수적인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한다면, 진보적인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한다. 내가 보기에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굳이 협의의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민주적인 투표, 정기적인 선거, 시민사회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정당 체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권력 교체 등이 제도화된다면, 광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통일 시대의 정치체제로 염두에 둘 수 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젠가 다가올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준비는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서민당 정부가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통일에 대한 정치·사회적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독일은 상당한 국내적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함의는,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사회 역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적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때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사회적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갈등의 해소는 좁게는 민주주의, 넓게는 정치사회가 갖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시민문화의 내면화는 좁게는 민주주의, 넓게는 시민사회가 갖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이른바 ‘남남갈등’의 해소와 통일 교육의 강화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먼저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 내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이 정치통합으로 시작해서 경제통합을 거쳐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남북갈등에서 비롯된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다. 한편 통일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 교육 역시 중대한 과제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은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통합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남남갈등의 현실과 해소 방안

남남갈등의 현실과 해소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이든 이념논쟁과 이념갈등이 활발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념은 정치·경제·사회적 가치를 기증하는 사고의 기본틀이며, 대다수 주요 정책들 역시 이러한 이념적 틀과 연관되어 추진되기 때문이다.³⁶⁾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화의 진전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탈(脫)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상당기간 이념과 탈이념은 공존하게 될

것이며,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는 이념논쟁과 이념갈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주목할 것은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지구적 변동을 우리 사회 현실에 접목할 때 한국사회가 여전히 20세기의 이념 구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선거와 같은 특정한 정치 국면이 전개되면 어김없이 이념 논쟁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박정희 시대의 성격, 대북정책의 기초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상대 세력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 등이 새로운 이슈로 더해지고 있지만, 보수 대 진보의 기본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이념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 이념 구도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변수인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중간층이 협소한 쌍봉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표 1> 2010년 대북관

적대적 : 42.9%		중간 : 18.9%	우호적 : 38.2%		모름 /무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3	32.6	18.9	32.8	5.4	0.0

질문: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다

출처: 노대명 외 (2010)

36) 프랑스 대혁명 당시 지롱드당과 자코뱅당에서,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와 칼 마르크스에서 사상적 기원을 갖는 보수와 진보는 근대사회에 대한 상이한 해석 및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이념적 대결구도를 이루어 왔다. 보수가 대체로 성장·시장·자유를 중시한다면, 진보는 주로 분배·국가·평등을 강조해 왔다. 문제는 오늘날 과연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자유와 평등을 칼로 무를 베듯 양단할 수 있는가에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국가를 중시하는 신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맞서고 있지만, 시장과 국가 중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세계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특권화한다는 것은 사실판단에서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범판단에서도 소망스럽지 않다.

〈표 1〉에 따르면, 2010년에 북한을 우리의 동반자로 보는 국민들은 38.2%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은 42.9%였다. 중도적 견해를 갖는 이들은 18.9%에 불과했다.³⁷⁾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왜 이념갈등이 치열한지에 대한 구조적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념갈등이 완화되려면 중간적 견해를 갖는 이들이 두터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경우 핵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북 문제에 있어 중간적 견해는 취약한 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상이한 대북정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대북정책은 공론장과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이러한 논쟁이 다름 아닌 남남갈등을 이루고 있다. 남남갈등이란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구조가 남한 사회 내에서 재생산되는 구조 및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견과 대립 구조’를 뜻한다(조한범, 2006).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를 돌아보면, 송두율 교수 사건, 천안함 침몰,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쟁점은 일단 불거지면 다른 모든 이슈들을 잠재우는 이념논쟁의 ‘블랙홀’이었다. 요컨대, 북한체제와 대북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진행되어온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 이념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대를 이루어왔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이들은 ‘종북 좌파’로, 북한을 동반자로 보지 않는 이들은 ‘반공 우파’로 인식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설령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적대의 식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남남갈등이라는 이념의 극단화 과정을 완화시켜야 할 정치사회와 공론장이 오히려 이를 부추겨 온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지지 그룹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대북 문제를 이용하고,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면 소모적 정쟁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회와 공론장의 만능이었다.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 있고 우리 사회 내부 의식마저 둘로 나뉘어 있는 ‘이중적 분

37)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이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의 질문에 중간층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이념에 관한 의식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 대 중도 대 진보가 안정적인 단봉형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대북관계나 경제모델 등 주요 사안별로 볼 때는 중간층이 협소한 쌍봉형 구도를 보여준다.

〈표 2〉 2010년 경제관

성장 : 46.3%		중간 : 20.9%	분배 : 32.8%		모름/무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8.5	37.8	20.9	26.4	6.4	0.0

질문: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출처: 노태명 외 (2010)

단사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자화상이며, 남남갈등은 이러한 이중적 분단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관용이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라 해도 용인하는 것을 뜻하며,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전제조건이다. 물론 관용과 불(不)관용의 경계를 나누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관용의 정신이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입장을 잠시 유보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주의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한 상대 비판과 자기비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념논쟁에서 자기성찰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자신의 입장, 논리, 대안에 대한 자기성찰 또는 자기비판은 내재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을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대북정책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 논리와 대안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 과감한 자기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정치사회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당에 부여된 일차적인 과제 중 하나가 사회통합의 제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정당은 오히려 남남갈등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타협 내지 통합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이라면 시민사회 내 존재하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데 갈등의 '조장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공론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언론은 대북정책의 특정한 지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해 남북관계 인식을 포함한 남남갈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남남갈등에 편승해 특정 이념 내지 정파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이념 내지 정파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시민사회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는 남남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실정치 영역에서 어느 정부든 이념적 지향과 이와 연관된 대북정책의 기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에 부여된 고유한 역할의 하나가 사회갈등 제어에 있는 만큼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해 가능한 중립적 시각에서 남남갈등 이슈들에 접근하고 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수든 진보든 사회단체들은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에서 완고한 사고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 두드러진 경향이 '보수적 시민사회 대 진보적 시민사회'의 대립인데, 남북 문제는 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열린 토론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남남갈등 해소에 접근하는 '대화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남남갈등에 큰 영향을 미쳐온 이념 구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념은 현실 세계를 독해하는 틀이자 눈이다. 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상대 세력의 이념에 대한 비판에 담겨진 정치적 의도의 과잉이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파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에 앞세우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일은 국가적 의제이다. 이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통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남갈등의 현실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의사결정 제도의 정착에 있다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된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4. 통일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통일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이 유용한 참고사례가 된다(김호기, 2000).³⁸⁾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과거 서독 정부에서 시작한 정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민주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나치즘이 기본적으로 좋은 이념이었는데 단지 그릇되게 실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1949년 서독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는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동의했지만 1979년 그 비율은 25%로 크게 감소했다(이영기, 1985: 44).

38) 독일에서 본격적인 정치 교육은 전후 연합국 점령 시기에 발전되었고, 그 역사적 기원은 헤센주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헤센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목표는 젊은 사람을 도덕적인 인격자로 길러 국민과 인류에게 경외, 박애, 존중과 관용 등을 통해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가 직업적인 유능함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길러내는 데 있다”(주헌법 제56조 4항)는 원칙에 기반했다. 또 헤센주에서는 사회과 교육이 개발되어 1949년 ‘정치 교육에 대한 방침’을 통해 정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정치 교육은 도덕 및 예절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사문제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국적 수준에서 종전 직후 연합국의 우선적인 관심은 반나치즘 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49년에 서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 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① 국민을 권위주의 복종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대화와 설득, 타협의 원칙을 세우고, ②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반군사회와 반나치화 교육을 실시하며, ③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민주화를 추진하고, ④ 국가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동반자적 협동관계로 공동체이식을 고취시키며, ⑤ 반공교육을 실시하여 공산주의 이념과 실제의 모순을 인식시키고, ⑥ 경제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김택환, 1992).

독일 정치 교육에서 통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사민당정부에 의해 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서독 정부는 독일 민족의 통일 의식을 계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지침을 마련했다(황병덕, 1995). 구체적으로 이 교육 지침에는 이념적 대립을 삼가야 하고,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동독인들도 독일 민족으로 서독인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동독 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서독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임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주민들이 느끼는 이질감이 크게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통일이 된 후 4년이 지난 1994년에 독일인들은 서로에 대해 여전히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구동독인의 61%, 구서독인의 44%가 하나의 민족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느낀다는 답변은 구동독인의 28%, 구서독인의 47%였다(Rünter, 1994: 61).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서의 거리감이 큰 것은 분단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진 통일 교육이 쉽지 않은 과제이었음을 알려준다. 통일은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고, 실제의 통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을 물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민족 형성과 민족의식에서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17세기 전반에 일어난 30년 전쟁에서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 수상 주도로 통일을 이루는 사이에 여러 소국들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결과 견고한 단일 민족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1945년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독일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강고한 단일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민족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점차 커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대가 젊어질수록 약해진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29세 연령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43.1%, 30대에서는 50.3%로, 40대에서는 56.5%,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67.8%를 기록했다(박명규 외, 2014: 37). 나이가 적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당위적인 진술이지만 통일 교육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는 일대 격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가 된다면, 그 파장은 현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변동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발생하게 되는 통일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증가해온 이질성을 해소하며, 민족적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현실을 돌아보면 그동안 통일 교육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포용정책을 추진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였다(박광기 외, 2005). 제도적 측면에서 김대중정부는 1999년에 통일 교육지원법을 제정했고, 노무현정부는 2003년에 국민적 통일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 교육 기본계획(2004-2006)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통일 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 통일 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 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일 교육이 이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북 정책의 기조가 포용정책에서 강압정책으로 바뀌면서 통일 교육에 대해서 앞선 정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통일 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은 크게 ‘통일 지향’과 ‘통일 대비’로 나누어볼 수 있다(박광기 외, 2005).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및 사회문화 생활을 알려주고,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등의 내용이 통일 교육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때 안보 교육이 통일 교육의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안보 교육과 통일 교육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임을 전달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과 더불어 공론장에서의 통일 교육,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계몽 또한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는 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통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문제는, 앞선 남남갈등에 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공론장은 보수적 공론장에 진보적 공론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김호기, 2006).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 분수령을 이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진보매체인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비교한 <표 3>을 보면, 남북관계와 연관된 한미관계에 대해 보수적 공론장과 진보적 공론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공론장에서의 이러한 보도 경향은 김대중정부 이후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3〉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한미관계 논조 비교

〈조선일보〉

시대 구분	주제분류	기사의 논조			전체
		긍정적/지지	중립적	부정적/반대	
남북 정상회담 이전*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가치	5	5	-	10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평등성	3	5	2	10
	미국의 군사전략	-	6	1	7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화	-	-	1	1
	주한미군 감축	1	38	4	43
	주한미군 철수	1	17	3	21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강화	4	8	-	12
	한국군 자주국방의 실천	1	2	-	3
	북한의 정책·군사적 위협	15	21	3	39
	연합토지 관리계획	-	3	1	4
	주한미군 후방배치	-	-	-	-
	한국내 반미현상	-	-	-	-
	미국내 반한현상	-	1	-	1
	기타	1	10	-	11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가치	4	12	-	16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평등성	-	6	-	6
	미국의 군사전략	2	7	2	11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화	-	5	7	12
	주한미군 감축	-	4	-	4
	주한미군 철수	-	41	20	61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강화	2	7	-	9
	한국군 자주국방의 실천	-	-	4	4
	북한의 정책·군사적 위협	5	6	-	11
	연합토지 관리계획	1	12	-	13
	주한미군 후방배치	1	14	8	23
	한국내 반미현상	-	18	19	37
	미국내 반한현상	3	1	-	4
	기타	-	1	-	1

* 1990년 1월 1일 - 1993년 12월 31일

** 2000년 6월 15일 - 2003년 12월 31일

출처: 전상대, 2004: 60, 62.

〈한겨레신문〉

시대 구분	주제분류	기사의 논조			전체
		긍정적/지지	중립적	부정적/반대	
남북 정상회담 이전*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가치	-	3	2	5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평등성	1	3	11	15
	미국의 군사전략	-	8	-	8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화	-	1	-	1
	주한미군 감축	11	29	1	41
	주한미군 철수	8	18	-	26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강화	1	9	1	11
	한국군 자주국방의 실천	4	4	-	8
	북한의 정책·군사적 위협	1	27	6	34
	연합토지 관리계획	3	5	1	9
	주한미군 후방배치	-	1	-	1
	한국내 반미현상	-	-	-	-
	미국내 반한현상	-	-	-	-
	기타	2	5	-	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가치	-	9	-	9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평등성	-	5	8	13
	미국의 군사전략	-	7	2	9
	주한미군 지위(역할) 변화	15	12	1	28
	주한미군 감축	-	12	-	12
	주한미군 철수	6	25	-	31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강화	-	6	2	8
	한국군 자주국방의 실천	1	1	-	2
	북한의 정책·군사적 위협	1	1	-	2
	연합토지 관리계획	3	15	6	24
	주한미군 후방배치	-	5	-	5
	한국내 반미현상	5	9	-	14
	미국내 반한현상	-	1	5	6
	기타	-	3	-	3

* 1990년 1월 1일 - 1993년 12월 31일

** 2000년 6월 15일 - 2003년 12월 31일

출처: 전성대, 2004: 60, 62.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수적 공론장과 진보적 공론장이 대북정책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관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에서 공론장이 갈등을 증대한다기보다 오히려 강화해 왔다는 점에 있다.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지상주의적 시각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긴장을 축소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보도해야 한다.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보도가 분단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라는 텍스트를 중시하되, 통일 지향과 대비라는 컨텍스트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동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 시민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민주적 시민문화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성숙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김호기, 1999). 이러한 민주적 시민문화와 시민윤리를 내면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민주적 태도와 가치를 형성시키는 기초이자 과정이기 때문이다.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통일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인간의 존엄성, 합리적 의사결정, 공공질서 덕목 등이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화될 수 있듯이,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수용, 북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 포용, 보편적 인권 가치의 승인 등은 지속적인 통일 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와 공론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라는 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통일 교육이 통일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각성의 토대를 이루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서 주어진다.

5. 잠정적 결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평화를 일구어야 한다. 대화와 평화와 통일은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분단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이다.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 있고 우리 내부 의식마저 둘로 나뉘어 있는 이중적 분단사회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이중적 분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수적 ‘신뢰 프로세스’든 진보적 포용정책이든 상대방에 대한 승인과 소통이 요구된다.

앞서 나는 통일코리아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적 각성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낙청이 말하듯, 통일은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남갈등의 해소와 통일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통일 시대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찰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택환, 1992. “독일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 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 김호기, 1999.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 , 2000.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구조와 변동,” 〈인문과학〉 제82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 2006. “이중적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구조변동,” 임혁백·고바야시 요시아키 편,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연출판부.
- 노대명 외, 2010.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광기 외, 20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 방안〉, 통일연구원.
- 박명규 외, 2014. 〈2014 통일인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박세일, 2013. 〈선진 통일 전략〉, 21세기북스.
- 백낙청, 200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 이영기, 1985. “서독의 정치문화,” 〈독일학 연구〉 제1호, 동아대 독일학연구소.
- 전성대, 2004. “일간 신문의 이념적 보도들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정상회담 전후 주한미군 주둔 논란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한범, 2006. 〈남남갈등 해소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황병덕, 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 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 Rünter, G., 1994. “독일 통일 전과 후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의의와 위상,” 전득주 외 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학문사.

2015 평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5 PeaceFoundation Symposium 11st Anniversary

NOTES

NOTES

희망을 찾는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동일코리를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과
변화

